2024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회의록

(부록)

국 회 사 무 처

피감사기관 **육군본부|육군교육사령부|육군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육군군수사령부|육군항공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육군인사사령부|육군수도방위사령부|육군동원전력사령부|육군학생군사학교**

일 시 2024년10월17일(목)
장 소 육군본부회의실

【서면질의】

○강대식 위원 …… 2
○강선영 위원 …… 19
○김민석 위원 …… 22
○박선원 위원 …… 30
○부승찬 위원 …… 32
○성일종 위원 …… 44
○한기호 위원 …… 60

【답변서】

○육군본부 …… 92

※ 서면질의

강대식 위원

(총 16 면)

2024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 육 군 -

2024. 10. 17.(목) 10:00

장소 : 육군본부

강 대 식 국 회 의 원

<2024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 육군, 일시 : 2024.10.17.(목) / 장소 : 육군본부>

육군 편제장비 중(中) 방공, 화포, 항공, 화생방 실작전 임무 수행에 부적합한 수명초과 노후장비 40%에 달해

1) 현황

◎ 육군이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편제장비 중 실제 작전 임무 수행에 부적합한 수명초과 노후장비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

◎ 항공기는 편제대비 보유율이 91% 수준에 불과해 유사시 제대로 된 작전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기본 편제대비 보유률을 높여야 할 것임.

◎ 항공기를 제외한 전 장비의 보유율은 편제대비 100%를 유지중이나, 방공(35.6%), 화포(39.6%), 화생방(40%), 항공(37.1%) 장비의 경우 수명을 초과한 노후장비의 비율이 약 40%에 육박함.

<육군 주요장비 보유 및 노후 현황>

구 분	보유현황(대)	보유율(%)	내용연수 초과(%)
전 차	2,400여대	101.2	22.7
장갑차	4,700여대	104.7	18.5
방 공	700여대	101.6	35.6
화 포	3,700여대	104.6	39.6
화생방	1,300여대	101.3	40.0
항 공	600여대	91.2	37.1

* 보유율 100% 이상은 정비대체장비(M/F) 보유로 인한 수치임.

◎ 유사시 전투력의 지속은 장비의 충분한 보유와 적절한 관리가 필수임. 육군 편제장비의 보유율과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유사시 우리 군이 과연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이에 육군은 실전에서 제대로 된 작전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국방부와 논의를 통해 종합적인 관리 대책 수립하고, 적절한 수량을 확보해야 할 것임.

=> 필요한 편제장비를 확보하여 전력발휘 극대화를 통한 강력한 전투력을 바탕으로 실전에서의 작전운용에 차질 없도록 전투태세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2) 질의

○ 전투태세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편제 장비의 보유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항공장비 보유률이 편제 대비 91% 수준에 불과하여 유사시 군의 작전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 항공장비 완전편성을 위한 육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 항공장비를 제외한 장비들은 100% 보유률을 유지중입니다.

(PPT) 하지만, 방공, 화포, 화생방, 항공 장비들의 약 40%가 수명을 초과한 노후장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후화된 장비들이 다수 있어서 실전에서의 작전 운용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육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PPT)

<육군 주요장비 보유 빛 노후 현황>

구 분	보유현황(대)	보유율(%)	내용연수 초과(%)
전 차	2,400여대	101.2	22.7
장갑차	4,700여대	104.7	18.5
방 공	700여대	101.6	35.6
화 포	3,700여대	104.6	39.6
화생방	1,300여대	101.3	40.0
항 공	600여대	91.2	37.1

* 보유율 100% 이상은 정비대체장비(M/F) 보유로 인한 수치임.

○ 유사시 전력발휘 극대화와 전투력의 지속은
장비의 충분한 보유와 적절한 관리가 필수적이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 앞서 지적한 것처럼
편제장비의 낮은 보유율과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유사시 우리 군이 과연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 할 수 없습니다.

이에 편제 장비의 완전편성과
노후화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와 건조계획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3) 결어
육군의 전력발휘 극대화를 통한
강력한 전투력을 바탕으로
실전에서의 작전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 육군, 일시 : 2024.10.17.(목) / 장소 : 육군본부>

北 핵 · WMD 위협 대응을 위한 화생방 장비 · 물자 편제보강 필요

1) 현실태 및 문제점

□ **대부분의 화생방 장비 · 물자 보유율은 양호, 화생방보호의만 보유율 급격히 저하**

○ 화생방보호의 보유율 저하 원인

- 화생방보호의-Ⅱ 개발 및 사업중단으로 '19년~'22년(4년)간 화생방 보호의 미확보

- '22년 12월 화생방보호의 신뢰성검사* 결과 부적격품 판정 대량(약 27만개) 발생으로 적격품 기준 보유율 급감

* 매년 예산 절감을 위해 유효기간이 지난 화생방물자를 대상으로 신뢰성검사를 실시하여 부적격품은 도태하거나 교육용으로 전환

** 신규품목 확보 전까지 부적격품을 치장 보관함으로써 전투력 부족 최소화 中

□ **부족한 화생방보호의는 '24 ~ '27년까지 전투준비태세, 업체생산능력, 가용예산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 확보예정**

○ 합참 등 관련 기관 협업을 통해 국방중기계획 반영 및 업체 생산능력 확대 등의 노력중

* '24년 업체 연간 생산능력 확대 : 9.5만벌 ⇨ 21만벌

☐ '24년 대비 '25년 화생방 장비 · 물자 예산(안)

< 예산 편성안 비교 >

'24년	⇨	'25년
474억원	101억원 감액	373억원

* 출처 : 육군

○ '25년 화생방보호의 확보 목표 대비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현 화생방보호의 보유수준을 감안한다면 예산증액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

< 화생방 물자 / 장비 보유 수준 >

구 분		보유수준	'25년 정부 예산안 기준 확보시
물자	화생방보호의	44%	45% ⇨ 63% (예산 300억원 증액시)
	개인제독제	93%	94%
	신경해독제	85%	90%
	탐지지	85%	100%
	수용성제독제	95%	100%
	유화제	99%	99%
	장비제독제	92%	97%
장비	소형제독기	98%	98%
	방사능측정기	88%	90%

* 출처 : 육군

2) 결론

☐ 부족 화생방보호의 확보를 위한 '25년 연도예산 증액 필요

○ '25년 화생방보호의 적격품 보유율 목표 : 44% ⇨ 63%

○ 화생방 장비 · 물자 예산 증액 요구(안) : +300억원

3) 질의

○ 총장님, 우리나라는 종전국가가 아닌 정전국가로서,

언제든지 적과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PT 1)

○ 그런데, 화생방물자의 장비보유수준을 보면

유독 화생방보호의 보유수준만 편제대비 44%로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 화생방 물자 / 장비 보유 수준 >

구 분		보유수준
물자	화생방보호의	44%
	개인제독제	93%
	신경해독제	85%
	탐지지	85%
	수용성제독제	95%
	유화제	99%
	장비제독제	92%
장비	소형제독기	98%
	방사능측정기	88%

* 출처 : 육군

○ 화생방보호의 보유수준이 낮아,

고도화되고 있는 北 핵 · 미사일, 화학무기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군참모총장 : 화생방보호의-Ⅱ 개발 및 사업중단, 부적격품 다수 등)

○ 화생방보호의-Ⅱ(투) 개발 지연 이유와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육군참모총장 : ~)

○ 육군의 부족한 화생방보호의 확보 방안은 무엇입니까?

(육군참모총장 : ~)

☞ 총장님께서는 北 핵·미사일, 화학무기 위협에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화생방·장비물자를 보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고, 현재 부족한 화생방보호의 확보를 위한
필요예산을 추산하여 본 의원실로
별도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 육군, 일시 : 2024.10.17.(목) / 장소 : 육군본부>

70년대 기술로 개발된 중형차량 사용하는 육군, 新 중형차량으로 교체 필요

1) 현실태 / 문제점

□ **70년대 기술로 개발된 現 표준차량(2½t, 5t)을 민수기반 플랫폼을 활용하여 연구개발하여 新 중형표준차량(2½t, 5t) 개발**

○ 사업규모 및 추진경과

- 사업규모(육군주도 통합개발) : 총 사업비 1조 7,061억원
(연구개발비 106.14억원)
- 추진일정 : 연구개발('19년 ~ '23년), 전력화('24년 ~ '41년 / 9,802대)

□ **통합개발 결정('15년) 후 연 600~800여대 획득하던 現 중형차량을 연 100여대로 축소 획득**

○ 2½t은 '19년부터, 5t은 '23년부터 미획득

○ 現 중형차량 보유율 저조(69%)로 전투준비태세 유지 제한

* 전방 포병부대 탄약운반 제한, 화포 및 발칸 견인 제한 등

○ 차량 축소획득으로 인한 수명초과차량 증가

구 분	계	수명연한 미초과	수명연한 초과									수명연한 초과율
			소계	1~3년	4~6년	7~9년	10~14년	15~19년	20~24년	25년 이상	운행 불가 (도태대기)	
2½톤	5,189	4,822	451	287	11	24	6	0	1	2	120	8.7%
5톤	2,487	1,851	737	104	17	3	70	138	197	78	130	29.6%

* 출처 : 육군

○ 現 표준차량은 구형·노후 차량으로 안전 및 편의사양 부재, 안전사고 위험 증가

* 최근 3개년 표준차량 안전사고 : 총 23건('23년 5건, '22년 10건, '21년 8건)

<최근 3년간 주요 차량 안전사고>

구 분	내 용
'21년	수송교육연대 교육생 이병이 2½t 트럭 영외 운전교육 중 우회전 하다가 가드레일 충격 후 전복되어 1명 사망, 1명 부상
'22년	일병이 2½t 차량에 피해자들을 동승시켜 소속대로 복귀 운행 중 핸들조작 미흡으로 우측으로 전도되어 피해자 다수 부상
'23년	상병이 강원도 화천군 소재 교차로에서 5t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 하던 중 민간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 출처 : 육군

3) 결론

□ **70년대 기술로 개발된 現 중형차량은 운용측면에서 안전사고 위험 상존**

○ 운전병 및 탑승병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新 중형표준차량 조기 전력화 필요

□ **중형차량은 전투준비태세(화포견인, 탄약운반, 병력/장비 수송 등) 유지의 핵심 차량으로 상시 작전준비태세를 위해 수명연한 초과차량은 조기에 도태시키고, 新 중형표준차량으로 적기에 교체할 필요가 있음**

<新 중형표준차량 적용 사양>

구 분		형 상	제원 및 특성
신형	2½톤		• 출력/토크 : 290 / 104(hp / kgf·m) • 최저지상고 : 414㎜ • 변속기 : 자동 • 제동방식 : ABS+ASR+EHS • 구동방식 : 4×4(선택적) • **안전 및 편의사양 : 자동변속기, ABS(브레이크 잠김 방지), ARS(바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제어), EHS(경사로 밀림 방지), 에어컨, 어라운드뷰, 블랙박스 등** • 단 가 : 약 1.54억
	5톤		• 출력/토크 : 339 / 127(hp / kgf·m) • 최저지상고 : 420㎜ • 변속기 : 자동 • 제동방식 : ABS+ASR+EHS • 구동방식 : 6×6(선택적) • **안전 및 편의사양 : 자동변속기, ABS(브레이크 잠김 방지), ARS(바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제어), EHS(경사로 밀림 방지), 에어컨, 어라운드뷰, 블랙박스 등** • 단 가 : 약 1.86억

* 출처 : 육군

3) 질의

(PPT 1)

○ 총장님, 본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육군에서는 수명이 초과된 중형차량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5t의 경우 수명연한 초과율이 무려 30%에 달해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형차량 수명초과 현황>

구 분	계	수명연한 미초과	수명연한 초과									수명연한 초과율
			소계	1~3년	4~6년	7~9년	10~14년	15~19년	20~24년	25년 이상	운행 불가 (도태대기)	
2½톤	5,189	4,822	451	287	11	24	6	0	1	2	120	8.7%
5톤	2,487	1,851	737	104	17	3	70	138	197	78	130	29.6%

* 출처 : 육군

○ 육본 관련부서에 이와같은 상황에 대하여 확인을 해본 결과 2019년부터 진행된 新 중형표준차량 개발 및 전력화를 위해 2½t(2와 2분의 1톤) 차량은 2019년부터, 5t(5톤) 차량은 '23년부터 획득하지 않았고, 차량 축소획득으로 인하여 수명초과차량이 증가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PPT 2)

○ 新 중형표준차량 전력화를 위해, 수명초과차량 및 구형·노후 중형차량을 운행할 수 밖에 없었고, 이로인해 발생된 사고만 최근 3년간 23건에 달합니다.

<최근 3년간 중형 차량 안전사고 현황>

구 분	주 요 사 고 내 용
'21년(8건)	수송교육연대 교육생 이병이 2½t 트럭 영외 운전교육 중 우회전 하다가 가드레일 충격 후 전복되어 1명 사망, 1명 부상
'22년(10건)	일병이 2½t 차량에 피해자들을 동승시켜 소속대로 복귀 운행 중 핸들조작 미흡으로 우측으로 전도되어 피해자 다수 부상
'23년(5건)	상병이 강원도 화천군 소재 교차로에서 5t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 하던 중 민간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 출처 : 육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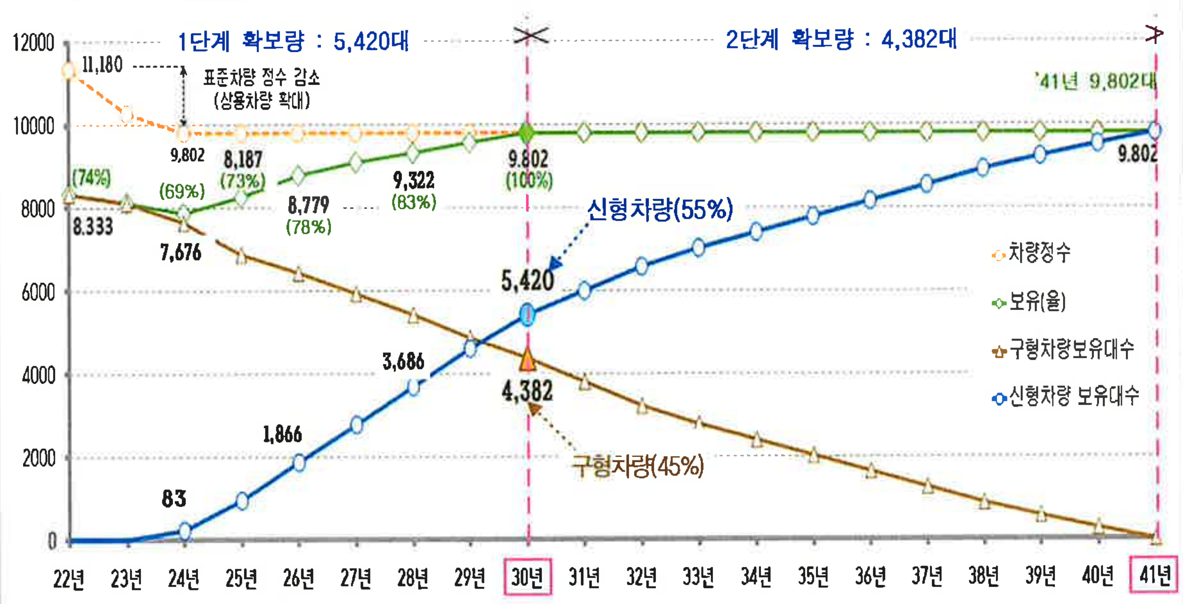
○ 70년대 기술로 개발된 現 중형차량은 운용측면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총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육군참모총장 : ~)

○ 새로 개발이 완료된 新 중형표준차량을 조기에 전력화 시킬 방법은 무엇입니까?
(육군참모총장 : ~)

☞ 중형차량은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핵심 장비로, 작전준비태세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총장님께서는 수명연한 초과 차량은 조기에 도태시키고 新 중형표준차량 적기 도입을 위한 연도별 획득 계획과 필요예산을 추산하여 본의원실로 별도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

<신형차량 확보 및 구형차량 도태 계획>



① **차량정수** :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감축 등으로 '30년부터 정수 축소 (11,180 → 9,802대) 예정,
⇒ '30년까지 9,802대를 목표로 전력화 계획 수립

② **보유율** : '24년 기준 보유율 69%, 현재 11,180대 기준으로 '24년 83대, '25년 691대 확보 및 해당 기간 263대 도태할 경우 보유율은 73%이나, 정부안 기준('25년 209대 확보)으로는 69% 수준

③ **구형차량 보유대수** : 보유하고 있는 차량 7,676대를 '41년까지 전량 도태할 계획

④ **신형차량 보유대수** : '24년 83대를 시작으로 '41년까지 9,802대를 확보 예정

* 출처 : 육군

<신형/구형 차량 제원 및 특성>

구 분		형 상	제원 및 특성
구형	2½톤		• 출력/토크 : 183 / 51(hp / kgf·m) • 최저지상고 : 270㎜이상 • 변속기 : 수동 • 제동방식 : 유압 • 구동방식 : 6×6 • 에어컨 : 없음 • 편의사양 : 없음 • 단 가 : 약 1.13억
	5톤		• 출력/토크 : 275 / 99(hp / kgf·m) • 최저지상고 : 270㎜이상 • 변속기 : 자수동 • 제동방식 : 유압 • 구동방식 : 6×6 • 에어컨 : 없음 • 편의사양 : 없음 • 단 가 : 약 1.65억
신형	2½톤		• 출력/토크 : 290 / 104(hp / kgf·m) • 최저지상고 : 414㎜ • 변속기 : 자동 • 제동방식 : ABS+ASR+EHS • 구동방식 : 4×4(선택적) • 안전 및 편의사양 : 에어컨, 어라운드뷰, 블랙박스 등 • 단 가 : 약 1.54억
	5톤		• 출력/토크 : 339 / 127(hp / kgf·m) • 최저지상고 : 420㎜ • 변속기 : 자동 • 제동방식 : ABS+ASR+EHS • 구동방식 : 6×6(선택적) • 안전 및 편의사양 : 에어컨, 어라운드뷰, 블랙박스 등 • 단 가 : 약 1.86억

<2024년 10월 국정감사 - 육군본부 등 : 2024.10.17.(목) 장소 : 육군본부>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사업, 제대로 해야

○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육군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2사단 GOP과학화경계시스템의 경미한 성능개량사업을 진행**해왔고, **올해부터 2027년까지는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맞습니까?

=>(박완수 육군참모총장) **네, 맞습니다.**

○ 특히 **올해부터 시작한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은 기존에 설치하여 운용 중인 노후화된 감시장비 광망을 모두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리섬유로 된 광망은 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모두 철거**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박완수 육군참모총장) ~

○ **GOP과학화경계시스템의 오작동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자주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총장님, 이러한 **오류, 오경보, 오작동 등의 문제**는 **감지시스템**에서 발생했습니까, 아니면 **감시시스템**에서 발생했습니까?

=>(박완수 육군참모총장) **감지시스템입니다.**

○ 일선 부대에서는 감지시스템의 오작동 등으로 민감도를 낮추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작동 등으로 장병들이 현장 확인을 위해 자주 출동해서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능개량을 할 때 오작동 등에 대해선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완수 육군참모총장) ~

○ 육군은 군병력 감축과 관련해서 2030년대 중반 GOP 근무 장병을 약 60%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오경보를 포함 GOP 작전 환경에 가장 적합한 시험평가 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하여 최상의 경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를 어떻게 반영할 계획입니까?

=>(박완수 육군참모총장) ~

○ 그리고 시험평가 기준을 GOP과학화경계시스템 도입 초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경이 되었고, ROC 또한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의 내용과 GOP과학화경계시스템의 경미한 성능개량사업 및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 전반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육군참모총장) ~

* 서면질의

강선영 위원

(총 2 면)

2024년도 국회 국방위원회
국 정 감 사

【 국정감사 】

- 육군본부 -

서면질의

2024. 10. 17.(목) 10:00

국회의원 강 선 영

서면 질의

군단급 대령직위 소수 전투병과 평정제도 재검토 필요

□ 질의 개요

< 서면질의 >

군단급 대령직위 소수병과의 평정 계통 개선을 제안하기 위한 서면질의 내용임.

□ 질의 내용

Q1. 현재 군단급에 근무하는 방공, 공병, 항공 장교는 군단작전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능 참모 역할을 수행함.
그러나 해당 병과의 우수한 장교들은 군단급 참모직위 보직을 기피하는 현상 발생.
이유는 방공, 공병, 항공병과 장교들이 통합된 평정 및 지휘추천을 받는 관계로 진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따라서 현행 소수병과의 통합된 평정 및 지휘추천 그룹을 분리시켜 능력있는 장교들이 군단급에 참모보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군단급 전투력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방안에 대한 총장님 생각은?

＊서면질의

김민석 위원

(총 7 면)

국회 국방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김민석

김민석 의원실 T. 02-784-2390~2 F. 02-6788-6160 E. newkms2030@gmail.com

기 관: 육군본부, 육군학생군사학교 담 당 자: 김미혜

ROTC필기시험 폐지 놓고 자화자찬
각 군 중 변경된 평가기준 가장 미흡…간부 하향평준화 우려

- 타 군 대비 부실한 육군 ROTC 선발 평가기준과 내용
-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한 고육지책이 모범감사사례로 둔갑

□ 현황

○ 각 군, 지원율 급감에 따른 ROTC 필기시험 폐지

- 연도별 ROTC 지원율 현황 (24.7.18기준)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지원율	1.6	2.4	2.7	2.8	3.2	3.4	3.8	4.1

출처 : 국방부

- (육군 폐지사유)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6조에 의거, 재학 중인 대학의 학업 성적으로 대체 가능, ▲1회성 필기시험보다 대학성적이 더 객관적 평가 가능, ▲지원자 시험부담 경감, 학업 전념 여건 보장
- 필기시험 폐지에 따라 ROTC선발 기준 변경, 인지능력, 직무적성, 상황판단, 국사 등 기존 평가 삭제 및 면접 및 체력 평가 배점 확대

□ 문제점

○ 대체평가기준 육군이 가장 낮고 미흡

- 올해 개편된 육군 ROTC 선발 평가사항을 살펴보면 한국사 점수가 총점에 포함되지 않고 가점으로 최대 2점만 부여하며, 대학성적 불합격 기준도 없음. 각 군 중 육군의 면접 점수 비중이 가장 높지만, 세부 평가항목은 가장 부실.

- 해군은 올해부터 AI면접을 시행, 20여개의 질문을 통해 지원자의 강약점 및 역량을 평가하는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 반면 육군은 AI면접을 통해 윤리의식・회복탄력성・자신감・논리성 등을 평가했으나 24년 전반기에만 실시하고 후반기부터는 점수에 미반영.

<필기시험 폐지 후 개편된 ROTC 평가사항 현황>

	육군	해군	해병대
한국사	1~2점 (가점)	5점 (총점 중5%)*	10점 (총점 중 5%)
대학성적	20점	**50점**	40점
	불합격 기준 無	**백분위 50%미만 불합격**	불합격 기준 無
면접	**40점**	40점	35점
	-AI면접 시행 (24년 전반기만 반영) -국가/안보관, 표현력, 인성/품성/사회성, 리더십	**-AI면접 시행(9점) (강약점, 역량 평가용)** -(육군 평가 항목 외) 전문지식, 목적의식, 성장환경 등 **-항목별 별도 배점부여**	-(육군 평가 항목 외) **사회/국사, 학교생활, 산술, 자기계발 등** -1,2면접관 면접 항목 차별화 **-2점 단위로 배점 세분화**

* 총점 100점 기준으로 환산
※공군 필기시험 유지

출처 국방부

- 육군 뿐만 아니라 각 군 ROTC지원율 급감하는 등 초급간부 모집에 비상인 상황. 단기복무 장려금 등 복지 및 처우개선 등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온 힘 다하고 있는데, 필기시험 폐지도 같은 맥락으로 판단됨.
- 면접평가 비율 높은 편인데 이유는? 12-1 인청
평가 항목 비교적 형식적인 수준이고 특이점 안보여. 현재 면접 항목・기준으로 지원자 자질・역량 세심하게 평가 가능한지 의문.
AI면접 후반기부터 반영 안하는 이유는? 12-2 인청
- 육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회성 필기시험보다 대학성적이 후보생으로서의 자질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대학성적 반영비율 타 군에 비해 현저히 낮고 불합격 기준도 없음.
이에 대한 육군의 입장은? 12-3 인청

○ **올해 초 단행한 ROTC 필기시험 폐지, 23년도 주요 모범사례로 선정**

- 육군 ROTC 필기시험 폐지 관련 논의 및 결정 과정
  1. ROTC지원율 제고를 위한 추진토의 (23.12.26, 육군·학군교)
  2. 24년 인력획득 추진전략·과제토의 (24.1.17, 육군)

  ⇒**폐지 결정(24.1.24)** ▪결정문서: 획득정책과-195.<간부 선발과정 개선소요 검토결과>

- 국방부, 올해 3월에 <24년도 전군 감사관계관 회의>에서 **2023년도 각 군 주요 모범사례 발표. 육군, ROTC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폐지를 <업무효율성 제고 사례>로 선정. ▲**지원자 선발 시험 부담 해소, **▲필기시험 운영비용 5,000여만원 절감 및 인적낭비 방지**를 주요 성과로 명시

□ **(업무효율성 제고 사례)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실효성 검토**

-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 간 **'09년부터 KIDA에서 출제한 문제로 필기 시험 시행**
  그러나 문제출제 비용, 감독관 수당 등 **5,000여만원 지출 및 과다한 준비인원 필요**
- 이에, **지원자의 선발시험 부담감 해소 및 예산 절감**과 **인적 낭비 방지**를 **위한 필기시험 폐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여 '24년 선발부터 필기시험 폐지**

(출처 : 국방부, [2024 전군감사관계관 회의자료])

이데일리

국방부 ROTC 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폐지 '모범 감사 사례' 선정

- 필기시험 폐지 논의가 작년 말과 올해 초 총 2번 이뤄졌고 올해 2월에 결정되었는데 23년도 모범 사례에 선정되었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

  12-4 인찰

- ROTC 필기시험 폐지를 모범 감사사례에 선정한 군은 육군이 유일함.
  ROTC 필기시험은 지난 15년간 운영되어왔음. 이제와서 비용과 인력소요의 문제를 필기시험 실효성 문제와 연결시키는게 상식적인 사고 맞나?

  12-5 인찰

- 충장, 지원율 급감으로 폐지할 수 밖에 없게 된 현실을 직시하고 반성하며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임. 필기시험 폐지를 통해 예산 절감과 업무효율성을 증대시켰다고 자화자찬을 할 때인가?

  12-6 인찰

☞ 목에걸면 목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식으로 판단하고 성과로 갖다 붙이는 이런 육군의 안일한 태도가 군간부들, 국민들이 군을 믿지 못하고 군에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요소임.

☞ 총장,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기 바람.
향후 ROTC 선발 평가 기준과 내용 보완계획 수립해 별도 보고하기 바람.

12-7 인척

국회 국방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김민석

김민석 의원실 T. 02-784-2390~2 F. 02-6788-6160 E. newkms2030@gmail.com

기 관: 육군본부 담 당 자: 박찬호

육군 전방경계 전력 부족한데 감시체계 관리도 소홀해

- 중국산 부품 CCTV 1,400대 중 93% 육군에... 문제 제품 10년 동안 방치돼
- 향후 과학화 경계시스템 핵심인 감시장비, 관리 지침 세우고 철저히 준수해야

□ 중국산 부품 포함 CCTV 육군에 1,300여대, 10년간 문제 적발 못 해

○ 지난 7월 19일, 방첩사는 국방부에 특정 업체(한국씨텍) CCTV 제품이 정보유출 우려가 있다고 보고하면서 전 군에 해당 CCTV 전수조사 및 사용중지 지시 공문이 하달되었고, 그 결과 1,400여 대의 CCTV가 일제히 사용 중지되었음

- 전체 1,400여대 가량 중 육군이 1,300여대로 가장 많음. 전량 회수 및 철거하였으며, 해·공·해병대는 전량교체 완료한 데 비해 육군은 거의 교체하지 못함

☞ 해당 CCTV를 가장 많이 보유한 육군이 정작 거의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에 따른 감시 공백이 장기화할수록 장병들이 추가 투입되어 희생하게 되는데? 선제적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 않나? (예산 문제로 지연)

12-8
~~국방~~
근참

○ 감시장비는 매년 부대보안점검 또는 보안감사를 통해 점검하게 되어있는데, 길게는 10년이 넘도록 보안문제를 걸러내지 못하고 사용한 것

☞ 해당 CCTV는 2014년 처음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으며 주둔지 방호, 안전 확보용뿐만 아니라 군사훈련장, GOP, GP까지 사용되었는데?

☞ 매년 정기 부대보안점검이나 수시 보안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나? 군의 기밀과 직결되는 점검이 요식행위로 이뤄진 것은 아닌지? 12-9 질책

○ 육군에서는 국방부의 공문이 하달되기 전까지 사태 파악이 안 되었던 것은 물론이고, CCTV 관리 규정도 마련하지 않았음

☞ 총장, CCTV와 같은 감시장비는 장비 획득 후 몇 년을 주기로 교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가? (10년) 예하 부대에 CCTV 관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하달된 바 있나? (없음) 12-11 근참

☞ 야전에서는 상용품의 경우 업체가 지정하는 주기가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관리하고 있다는데? CCTV는 국가정보 보안에 직결되는 장비인데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나? 12-12 정책

○ CCTV 설치를 위한 예산이 여러 사업으로 나눠 사용되면서 현황 파악이 더욱 느렸음. 특히 각 부대가 자체 운영경비 등으로 CCTV 장비를 설치한 경우 국방부가 전수조사를 지시하지 않는 이상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었음

☞ 예하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한 CCTV가 주요 보안 시설에 설치된다면,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떠넘길 셈인가? 중앙에서 지침을 주고 관리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겠나? 12-13 정책

○ 육군에서는 현재 수거한 1,300여대의 대부분 수량이 주둔지 방호와 예비군 훈련 등 통제를 위한 용도이고, 전방경계로 쓰인 제품은 거의 없다고 답변함

☞ 경계작전이 이뤄지는 전방은 노출되면 안 되고, 후방에 있는 주둔지와 훈련장은 상관없다는 보안의식 자체가 매우 큰 문제 아닌가? 12-14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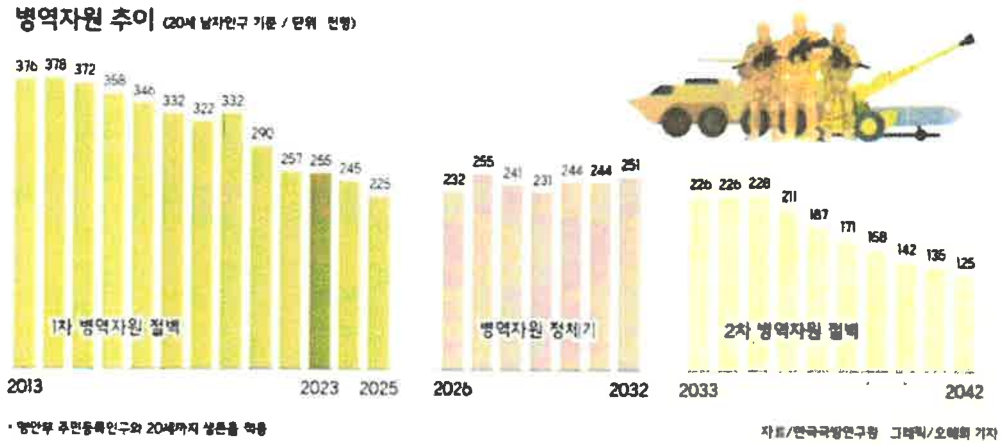
☞ 더욱이 해당 CCTV가 200여 대 설치됐었던 과학화 훈련장의 경우 KCTC 훈련이 진행되는 곳이 아닌가? 우리 군의 전략과 전술이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도 있었는데, 사태를 덮기 급급한 군의 태도가 적절하다고 보나?

12-15 정책

□ 병력 수급 위기 대응할 과학화 경계시스템, 감시장비 관리 철저해야

○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와 관세청이 해당 CCTV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제조회사 CCTV에 대한 조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음

☞ **현재 인구절벽 문제로 2차 병력 수급 위기가 곧 도래하지 않나? 현실적으로 육군에서 상당한 인원을 감축해야 할 텐데,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감시장비 관리가 이렇게 미진해서야 되겠나?**



☞ **육본 내에서도 여러 과로 나뉘어 있는 관리 책임을 하나로 모아 종합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예하 부대에 관리 지침을 명확하게 내려 매년 보안 점검을 철저히 진행해야 할 것임. 총장께서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나?**

＊ 서면질의

박선원 위원

(총 1 면)

<박선원 의원실>

계룡대 30분 넘게 정전, 핵심장치 고장에 규정위반도	★★		육

1. 질의배경

o 24.09.11 계룡대 인근 전신주 철거 공사 중 순간 정전 발생. 민간시설은 금방 복구됐으나, 정작 계룡대는 30여분간 정전. 전기공급에 문제가 있을 때 활용되는 핵심 장비가 고장·작동하지 않았기 때문. 더 나아가, 계룡대는 핵심 군사시설임에도 <주·예비 전력 공급 변전소>조차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조속히 조치해야

2. 질의

▲ 총장, 지난 9월 11일 오전 계룡대 36분간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짐. 우리 육군의 경우 정전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어느정도였나?
(예상답변 : 피해 없음. 핵심 시설은 UPS, 비상발전기 가동했음)

▲ 계룡대 전체 비상(자체)발전기 12개, UPS(무전원 전원공급장치) 15개 설치되어 있음. 이러한 장치 없는 건물은 30분 넘게 업무 진행하지 못했던 것. 총장 계룡대에서 정전이 발생한 이유를 알고 있는가?

▲ 정전 등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주전원을 예비전원으로 자동전환해주는 핵심 장치가 고장으로 미작동했기 때문(ALTS라는 장비임).** 비상시 활용하는 장비가 정작 비상시에 작동하지 못한 것.

▲ 문제는 또 있음. 총장,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따르면 <전·평시 주요 지휘시설> 등은 예비전력 체계를 갖춰야만 해. 계룡대도 예비전력 체계를 갖춰야하는 시설 중 하나. 잘 갖추고 있나?

▲ 기준에 따르면, 예비전력은 주전력 변전소와 분리해 별도의 변전소에서 공급받아야함. 그러나, 현재 계룡대는 주·예비전력을 모두 같은 변전소에서 공급받고 있음.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

▲ 두마변전소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룡대 전체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할 우려 존재함. 한국전력측과의 협의를 통해 예비전력 분리를 조속히 추진해야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조치하겠는가?

※ 서면질의

부승찬 위원

(총 11 면)

<부승찬 의원실>

■ 질의

○ 총장님, STE 합성훈련환경체계, ITE 합성전장훈련체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금일 교육사 업무보고 15페이지를 보면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육군은 소대급 이하, 대대급 이하, 여단급 이상으로 제대별로 각각의 훈련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STE설명에서 LVCG를 STE로 통합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ITE에서는 또 다시 LVC연동훈련체계의 연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그럼 육군은 STE로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여단급 제대이상에서는 LVC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면 당장 이 사업을 중지하고 사업의 목표, 개념을 재설정해서 재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문언적으로 보면, '합성훈련체계'는 같고, 유일한 차이는 '전장'인데, 실제 두 사업에서 말하는 전장은 하나는 메타버스(STE), 또 다른 하나도 연동(ITE)으로 즉, 두 사업 모두 SW적 가상공간에 불과함

○ 그리고 2040 군구조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무인복합체에 따라 군구조, 부대구조 변화의 불가피합니다. 군단, 사단, 여단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군은 또 다시, 제대별로 분리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있습니다. 시뮬레이터, 가상훈련도구가 다를 수는 있어도 결국 이를 연동하고 훈련을 운영하는 운용체계는 하나여야 육군의 어느 제대도 사용 가능하고 향후 국방클라우드의 활용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소대급 이하, 대대급 이하, 사·여단급 이상으로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은 미군의 모듈화, 국방화 모듈화 정책과도 배치되는 정책입니다. 또한 결국 교육사가 언급한 과학화 훈련은 결국 합성공간, 즉 가상공간에서 훈련을 연동케하는 것 아닙니까? 실기동훈련이 아닙니다.

- 결국 하나의 운영체제 SW만 있으면 모듈화, 계열화하여 부대 성격과 편제와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향후 우리 군의 변화에도 우리 군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총장님 동의하십니까?

○ 교육사가 이야기하는 STE사업이 2차 평가 중인데 3기갑여단과의 연동이 계획대로 제대로 연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 3기갑여단의 운용체제는 외국산인데, 운용체제가 연동이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 군이 시험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결국 동일한 외산 SW를 사용한다는 것인데, 미국도 그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미군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국산 기술을 이용한 우리 육군만의 운영SW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총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총장님, 수십년간 LVC을 연동하고자 했습니다. **각각의 체계가 다르고 당시에는 SW에 표준화도 없기에 그리고 각 제작사가 원천기술을 공개하지 않았기에 불가**했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지금 우리 육군에 필요한 것은 각종 시뮬레이터, 가상훈련도구가 아닙니다. **이들을 표준화할 도구, 이들을 연동시킬 SW 즉 안드로이드와 같은 우리 육군만의 운용SW가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국산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제대가 바뀌고 무장이 바뀔 때마다 원천 제작사에게 성능개량 비용을 지급하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꼭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첨단과학화훈련체계 사업을 재점검해야 하고, 그 결과를 관련 예산심의 심사에 활용하기 위해 저희 의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 중견간부 이탈방지를 위한 처우개선을 보니 주거 개선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부족관사를 매입하고, 모듈러형 간부숙소를 마련하고 LH임차사업을 확대**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 총장님, 현재 낙후된 주거환경으로 인해 **군 주거시설 이용자의 47%가 불만족하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협소한 관사, 노후된 관사가 주된 원인입니다.
- 실제, **관사의 8%가 노후하고, 간부숙소의 경우에는 32%가 노후합니다. 관사의 46%가 협소하고, 간부숙소의 43%가 협소**합니다.
- 특히, **간부숙소의 경우에는 8천여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총장님, 초급간부의 수급도 어렵지만, 모집된 인원에게 제대로 된 숙소도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대적관, 애국심만을 강조한다고 되겠습니까?

- 관사가 부족한 지역에 있어서는 **전세대부를 지원하고 있는 이 또한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만이 있다**고 하는데, 총장님 실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 현재 우리 군은 병력자원의 감소로 간부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무원에 대한 주거 지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개정도 국방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 **총장님, 주거여건 보장을 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이 보고를 받기로는 육군이 추진하고 과제 중에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 부대가 많은 녹지지역이나 그린벨트 지역내 군 주거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린벨트법」 등을 개정**이 해야 합니다. 총장님 맞습니까?

- 국방위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셔서 국토위 의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국방예산으로 관사를 짓는 것도 좋지만, 전세대부와 건립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전문하는 공기업 LH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군부대 이전시에는 **군은 부지를, LH는 공공임대를 제공한다면 육군과**

LH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동의하십니까?

- 국방부와 국토부, 상급기관의 협력이 우선된다면 국방부에 적극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인에 직업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총장님 적극적으로 활동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다. 필요한 정책이나 법 개정 소요가 있다면 정리해서 저희 의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 항공사령관님, **코브라 헬기가 1년이 넘게 운항정지 중**입니다.

- 지난 해 8월 **회전날개가 분리되는 사건으로 아직까지 원인과 검사절차가 확립되지 않아 운항 재개가 되지 않은 것**인데 맞습니까?
- 전력운영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 2018년에도 회전날개가 분리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 1988년 도입되었으니, **36년째 운영 중인데, 미 육군은 2001년에 도태**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도태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LAH 전력화에 따라 순차도태]

○ 총장님, 1년이 넘게 60여대 공격헬기가 활주로에서 서 있습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전력에 대해 운항을 재개할 수 없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1년이 넘게 대책이 완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 제가 확인해 보니, 결국 기체 제작사인 **미국 벨사와 날개 제작인 카만사의 분석결과가 회신 되지 않다 보니 1년 넘게 서 있는 것**입니다.

- 사고 이후 작년 10월 사고원인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 주회전날개의 상부 접합부위에 들뜸 현상이 있는 코브라 헬기 60여대를 검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첨단장비가 동원된 것이 아니라, **기술교범에 따라 Tap-Test, 즉 날개표면을 두드려서 내부 결함을 식별한 것**입니다. 사실상 육안검사랑 무엇이 다릅니까?

○ 그래서 육군은 **외주정비업체로 하여금 검사방법을 개발하게 하였고, 현재 이 방법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전수검사 언제 종료됩니까?

- 이 방법도 훌륭할 수 있지만, **결국 원제작사가 확인해 주는 방법은 아니고, 원인 분석도 없이 현상에 대한 재발 방지일 뿐**입니다.

○ 원제작사의 분석 지연으로 물론 30년이 넘은 오래된 전력이지만 **1년간 활주로에만 있는 것은 전력손실이 분명**합니다. **관계관들을 현지로 보내서라도 조속히 사고원인과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회전날개가 불안한 헬기에 우리 조종사들을 태우는 것은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빨리 최신 전력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전력 및 도태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 확인 하셔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 일명 마일즈왕이라고 불린 '김 원사'가 지난 8월 26일 구속되었습니다.

❍ 훈련 효과가 좋아 10년 넘게 추진되어 온 마일즈 사업에서 원사 한 명이 15년간 종사했다는 것도 의아하지만, 공무출장 및 개인 휴가 때 체류비를 지원받는다는 것이 어느 시절 이야기인지, 김 원사의 비리에 알고 계십니까?

❍ 군 검찰에 따르면, 뇌물을 제공한 두 업체의 수주 사업의 수익 규모가 1천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부정한 수익을 거둔 업체의 이익을 회수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총장님 동의하십니까?

❍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원사는 특정 업체에 수익을 몰아주기 위한 구매요구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확인하였습니까?

❍ 특히 지난해 12월 남양주 예비군훈련장에 납품되었지만 통신불량으로 사용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는 하자구상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 해당 통신모듈이 얼마나 공급되었는지 전수조사는 실시하였습니까?
- 통신불량의 이유가 김 원사가 둔둔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의 통신모듈 변경이라고 의혹에 대해 육군의 조사결과는 무엇입니까?
- 총장님, 이전에 사용하던 통신모듈이 단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명 규격 변경은 단종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육군은 단종을 이유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또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육군의 입장을 보면, 과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본 위원은 보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봅니다.

- 본 위원은 단 한 사람에 의해 사업이 진흙탕에 빠진다면 사업 방식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육군 스스로 개선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미온적으로 처리한다면 마일즈 사업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할 것입니다.

❍ 종합감사 전까지 언론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해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그리고 뇌물제공 업체를 이 사업에서 어떻게 퇴출시킬 것인지 육군의 입장을 정리하여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할 만한 조치를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장비라고 해도 그 과정이 부정하다면 그 사업의 진행은 불가한 것입니다. 이 정부에서 R&D카르텔을 이유로 R&D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 육군의 입장

ㅇ 마일즈 장비 사업 계속 추진?

- 마일즈 장비는 야전부대의 실전적 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장비로 사업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할 예정임.
- 마일즈 장비는 쌍방교전을 통해 상호간 피해를 평가할 수 있는 효과성이 입증된 장비임.
- 야전부대의 실전적 훈련여건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장비로 사업절차를 준수하여 야전부대에 보급 예정임.

- 완료 : 구형 보병 소대급('98~'99년 / 57식), 구형 보병 중대급('14~'17년 / 17식), 포병 마일즈('20~'24년 / 48식)
- 진행 : 보병 소대급('19~'25년 / 84식)
- 예정 : 보병 중대급('28~'29년 / 17식), 화생방('25~'26년 / 84식), 항공/방공('25~'26년 / 9식), 기계화부대 중대급('28~'29년 / 9식)

※ 국방전자조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사업현황

24.07.03 부족마일즈장비 제조납품, 유텍 7.34억
23.10.05 전차 마일즈 노후교체 장비체계, 네스랩 31.2억
23.06.27 예비군 교전훈련장비체계, 한컴라이프케어 81.13억
22.06.22 22년 예비군 교전훈련장비 구성품, 한컴라이프케어 162억
23.05.10 23년 마일즈장비(쌍방훈련)제조 유텍, 28.78억
23.03.31 23년 현궁 유도탄훈련장비(마일즈용) 유텍, 15.46억
22.08.17 22년 소대급 교전훈련장비체계, 한컴라이프케어 208.62억
21.11.26 21년 특전사 특수타격종합훈련장 중대급 마일즈(제조), 네스랩 27.37억
21.04.04 21년 신형 소대급 교전훈련장비(제조), 한컴라이프케어 104.36억
21.03.30 21년 예비군 교전훈련장비(제조), 네스랩 42.97억 / 한컴 심사신청

■ 질의

○ **병력자원 감소, 4차 산업혁명으로 과학기술의 변화, 전장의 확장으로 인한 전 영역작전 및 하이브리드전의 양상** 등으로 인해 우리도 미래 안보환경에 맞는 군구조, 부대구조를 재설계에 해야 합니다.

- 그런 의미에서 **2020년부터 국방부·합참·각군 그리고 KIDA까지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고, 오늘 육군의 업무보고서를 보니, **설계안을 마련하고 완전성을 제고하고 위한 토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병력감소, 하이브리드전 이런 환경이라면 지금보다는 부대구조가 단순화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M-BCN, 정찰 및 군통신위성의 확보로 인해 C2(command&control)가 한 화면에서 가능해진 상황이라면 더욱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육군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변화, 군단·여단 중심의 경량화된 지휘구조)

○ 총장님, **유무인 복합체계가 도입되면 당장 인력 감축의 효과가 있습니까? 운용병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소대 중화기병이 아니라 드론 운용병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지금의 **부대 구조는 유무인 복합은 물론 첨단 장비를 운용하기에 맞지 않는 부대구조가 아닌가 하는데**, 총장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본 위원은 저희가 다음 주에 방문할 **제2작전사가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단순히 북한의 특작부대, 해안침투를 대비하는 후방작전부대가 아니라 그 성격과 개념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 **지작사가 지상전을 책임지고, 2작전사는 기존 후방작전 중심에서 주변국과 비전통위협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전환하여서 우주, 사이버, 대테러 타격 등 하이브리드전 중심의 부대구조로 변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육군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 본 위원이 알기에는 **육군은 학교기관부터 미래 병력감축에 대비하여 주둔지 경계병력부터 조정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하였고 육사와 상무대에서 시범실시 하였고 일부를 민간인력으로 운용하기 위한 소요를 제기**하였습니다.

- 병력부족의 시대에서 인력 활용은 극대화되어야 합니다. 예비군을 적극 상시 병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계급정년 등으로 군을 떠난 인재들을 적극**

활용한다면 민·군 융합형 작전지원조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우리 군의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총장님 동의하십니까?

- 육군의 TF, 부대유형별 설계안에 대한 완전성을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 육군이 그리고 있는 군구조가 성공하려면 국회 국방위 등 다양한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방위원님들에게 보고도 자주 하는 등의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 총장님, 금일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초급 간부의 지원율이 거의 반 토막이 났습니다. 육군이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숫자의 실체가 보입니다.

○ 2023년 4,800여명의 장교가 획득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육사, 간부사관을 제외한 3사, 학군, 학사 전문사관이 정상적으로 획득되지 않아 500여명을 선발하지 못했습니다.

- 특히 3사와 학군은 본인이 군인의 길을 선택하여 입교 또는 학생군사훈련을 받는 간부 모집형태임에도 420여명이 획득되지 못했습니다.

○ 부사관도 모든 모집형태에서 소요인원을 채우지 못해 작년 획득소요 14,000여명에서 절반도 못 미친 6,300여명을 모집하는 데 그쳤습니다.

○ 총장님, 올해 간부 모집 상황은 어떻습니까? 획득소요계획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 모집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대위, 중·상사 계급의 희망전역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사관의 희망전역자는 2019년 1,070명에서 2023년에는 1,910명으로 78.5% 증가하였습니다. 총장님 알고 계시죠?

- 특히, 중사의 경우에는 2019년 410명에서 2023년에 920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육군의 직업만족도가 2020년 79.2%에서 2023년에는 49.6%로 무려 30% 가까이 하락하였습니다. 2명 1명이 직업으로서의 육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총장님 동의하시죠?

○ 본 위원은 지금과 같은 매번 똑같이 나오는 대책(지휘권 확립, 행정업무 경감, 장기복무 선발률 확대, 수당 인상 등)으로는 이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 총장님, 초급간부 자산형지원금이라는 대책을 업무보고서에 적어 놓았는데, 직업이자, 공무원에게 급여가 아닌 적금형식의 지원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신 것입니까? 타 부처, 관계기관에 의견은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 단순히, 용사들에게 주는 '내일 준비 적금'을 따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처방이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병의 원인을 찾는 검사, 즉 우리 초급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할 국민, 20대들에게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 돈이 얼마나 들더라도 전수조사를 제안합니다. 그래야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가 되고, 대국민, 대국회, 타 부처를 설득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총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본 위원이 KIDA로 받은 이 통계 또한, **각 군에**서 **1,500명을 선발한 조사에 불과합니다.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 **결국 중요한 것은 신뢰와 존중**입니다. 우리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때 자랑스러운 군이 될 것이고, 진정 국민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 앞서 언급한 KIDA의 직업만족도 조사에서 **'사회적인 평가'라는 항목에서 조사자들의 만족도 평가는 12.6%에 불가**합니다. 우리 내부의 자존감, 외부로부터의 존중이 없다고 우리 스스로가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군복을 입었던 사람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대책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2019년 만족도 79.2%가 다시 나오지 않겠습니까? 육군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합니다. 오늘 보고서보다 더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질의

성일종 위원

(총 15 면)

1 지역방위사단 주둔지 통합 및 밀리터리 타운 조성 필요성

■ 질의 요지

☞ 총장, 병력 감소에 따른 예하 지역방위사단 예하 부대 통폐합 계획이 어떻게 되나?

☞ 현재 출산율 기조라면, 2020년에 32만 명인 20세 남자인구가 2040년이면 15만 명 아래로 감소될 예정인데, 현재의 지역방위사단 편제(現 3만 3천 명)를 유지할 수 있나?

☞ 당장 15년 뒤 지금의 절반인 병력으로 현재 부대 편제를 운용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지금 당장 통합 주둔지 형태의 '밀리터리 타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육본의 계획은 전방 일부지역 통합 주거단지 조성(5개지역 각 100세대 이하 규모 주거지 공급) 수준에 머물러있음.

☞ 육본이 과감하게 지역방위사단 예하부대의 경우에는 최소 여단급 '밀리터리 타운'을 조성하고, 비전투분야 업무는 군무원과 민간 공무직 근로자에 이양하는 계획을 만들어야 함. 경계 분야의 민간인 근로자의 외주가 이루어졌을 때 법령개정 소요가 있나?

■ 산재한 육군 지역방위사단 예하 부대 통폐합 필요성

○ 현재 육군은 13개 상비 보병사단, 3개 기계화 및 기동사단, 1개 신속대응사단, 12개 지역방위사단, 5개 동원사단을 합친 총 34개 사단을 운용하고 있음.

○ 이 중 지역방위사단의 경우, 사단 예하 보병여단(4개~5개)이 여단본부와 각 대대가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어 **각 부대별 경계 인력 부담 상승과 소규모 부대 노후 시설 보수 비용 증가로 인해 병력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방 시설 유지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국방 시설유지비 추이 >

출처 : 국방부

(단위 : 억 원, %)

연 도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시설유지 운영)	13,657 (100)	15,178 (100)	16,422 (100)	17,186 (100)
공공요금	4,913 (36.0)	5,033 (33.2)	5,320 (32.4)	5,649 (32.9)
시설유지 관리비	8,744 (64.0)	10,145 (66.8)	11,102 (67.6)	11,537 (67.1)

○ 전방 상비사단 예하 보병여단의 경우 GOP 투입 등 현행작전으로 인해 주둔지 통합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후방

지역방위사단 및 기행부대의 경우 기존 부대 및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주둔지 통합을 통해 경계 및 당직, 부대 정비 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음.

< 미활용 군용지 보유현황 >

출처 : 국방부

(단위 : 만㎡)

연도	합계	수도권	강원	충청	경상	전라
2018	2,505	1,317(52%)	425(17%)	138(6%)	290(12%)	335(13%)
2019	2,142	1,126(52%)	381(18%)	185(9%)	238(11%)	212(10%)
2020	1,912	1,047(55%)	316(17%)	100(5%)	161(8%)	288(15%)
2021	1,485	810(54%)	309(21%)	87(6%)	136(9%)	143(10%)
2022	1,316	649(49%)	273(21%)	103(8%)	96(7%)	195(15%)

○ 또한 20년 12월부터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기존 보병연대 -> 여단 편제로의 조정을 통해 미래 육군이 **독립 작전이 가능한 '여단 중심의 모듈형 부대 구조'를 지향하고 있는 바, 여단급 예하 부대의 주둔지 통합이 적절함.**

○ 혼재된 주둔지 통합을 통해 주거·체육·복지·교육시설이 통합된 대규모 '밀리터리 타운' 건설이 이루어진다면, 군인과 군인 가족의 정주성 및 생활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특히 감소하고 있는 병력은 전투 분야 임무에 집중하고, 비전투 분야(부대 출입 경계, 조리, 행정 등) 업

무의 경우 군무원 및 민간인 공무직 근로자에 이양이 가능함.**(기존 소규모 주둔지 경계 개념 -> 밀리터리 타운 출입관리 개념)**

○ 특히 인구소멸위험이 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외곽 이전 군부대의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건 상황임. 실제로 통합 이전을 계획 중인 대구 시내에 위치한 4개 부대(제2작전사령부, 제50보병사단,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방공포병학교)의 유치를 위해 4개의 시군이 유치전에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밀리터리 타운'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이 가능함.

<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통합 주둔지 지도 >

* 부대, 훈련장, 상업지구, 주거지구, 체육시설, 교통센터 등이 통합 주둔지 내에 위치하고 있음.

○ 다만 육군 해안경계 부대의 경우 현행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후방 지역 해안경계 임무 범위에 대한 해경과의 조속한 협의가 필요함.

2 육군 학군단과 3사관학교 임관 인원 감소 대책

■ 질의 요지

☞ 총장, 학군단 모집 경쟁률과 임관 인원이 지속 감소하고 있음.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및 후보생의 입영 훈련비 인상이 이루어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유가 무엇인가?

☞ 결국 학군단 자원과 병사 간 10개월의 차이가 나는 복무기간에 대한 감축이 필요한 상황인데, 육군의 계획이 어떻게 되나?

☞ 3사관학교의 경우 선발 인원과 임관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또한 4년제 출신인원의 비율도 증가해 학군단과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라는 논란도 있는데, 3사관학교의 임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 3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장기복무를 위한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임. 육군에서 국회에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열심히 강조해야 함.

■ 육군 학군단 및 3사관학교 임관 인원 지속 감소

○ 학군단의 의무 복무 기간은 28개월로, 감축된 병사 현역 복무 기간인 18개월과 비교 시 10개월 차이. **학군단의 모집 대상인 대학생의 관점에서 10개월은 무려 2개 학기 기간에 달해, 장교로 복무하는 것 보다 병사 복무를 통한 조기 취업 준비가 더 장점으로 다가오는 상황임.**

○ 이에 현행 학군단 자원의 복무기간에 **양성 기간 4개월을 의무 복무 기간에 합산하여 28개월 복무기간을 유지하면서, 실 복무기간을 24개월로 감축하는 등 감축 대책이 필요함.**

○ 실제로 지난 5년간 학군단 후보생 지원율과 임관 인원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 특히 수도권 대학의 상황은 더욱 심각.

○ 2023년 수도권대학의 경쟁률이 1.3:1로 추락했고, 올해도 경쟁률이 비슷한 상황임. 특히 중도 탈단이 이어져 **24년 임관(21년 선발)한 62기의 경우 1,500명의 모집 인원 중 870여 명만 임관함.**

< 최근 5년간 수도권 학군단 모집 현황 >

출처 : 육군본부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 9월
모집인원	1,300 여명	1,500 여명	1,300 여명	1,100 여명	1,100 여명
지원인원	3,200 여명	3,000 여명	2,400 여명	1,400 여명	1,400 여명
경쟁비	2.4 : 1	2.0 : 1	1.9 : 1	1.3 : 1	1.3 : 1
임관인원	1,500 여명 ('17년 선발)	1,300 여명 ('18년 선발)	1,300 여명 ('19년 선발)	1,100 여명 ('20년 선발)	870 여명 ('21년 선발)

< 최근 5년간 비수도권 학군단 모집 현황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 9월
모집인원	2,200 여명	2,000 여명	1,900 여명	2,100 여명	2,000 여명
지원인원	6,500 여명	6,400 여명	5,300 여명	3,700 여명	4,100 여명
경쟁비	3.0 : 1	3.1 : 1	2.8 : 1	1.8 : 1	2.0 : 1
임관인원	2,100 여명 ('17년 선발)	2,100 여명 ('18년 선발)	1,900 여명 ('19년 선발)	1,900 여명 ('20년 선발)	1,600 여명 ('21년 선발)

○ 지원율 및 임관 인원 감소는 결국 우수하지 못한 장교 인력의 수급으로 이어져, 10년 뒤 그 자원들이 중간 간부가 되었을 때 우리 국방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음.

○ 3사관학교의 경우 **2022년 최초 선발된 547명 중 444명이 입학하는 등 최근 5년간 선발 후 입학을 포기하는 인원이 증가추세에 있고, 2023년에는 550명 모집인원 중 427명을 선발하**

며 모집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상황임.

< 최근 5년간 육군3사관학교 모집 현황 >

출처 : 육군본부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선발인원	550명	550명	550명	547명	427명
입학인원	529명 ('18년 선발)	523명 ('19년 선발)	523명 ('20년 선발)	532명 ('21년 선발)	444명 ('22년 선발)
임관인원	489명 ('16년 선발)	496명 ('17년 선발)	483명 ('18년 선발)	477명 ('19년 선발)	477명 ('20년 선발)

○ 또한 3사관학교 입학 인원의 4년제 출신 비율이 꾸준하게 증가해 2018년 35%에서 2023년 51%로 증가하였음. 즉 학군단과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함. 실제로 학군단이 있는 대학에서 3사관학교 모집을 진행하면서 갈등이 늘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음.

○ 3사관학교에 임관을 하는 인원의 경우, 학군과 학사 인원들보다 군에 남고자 하는 의지가 많은 인원이므로, 법 개정(군인사법, 24년 8월 2일 본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3사관학교 임관자의 장기복무를 제도화해 지원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3 외국인 모병제도 도입을 위한 다문화 인식 제고 필요

■ 질의 요지

☞ 총장, 추후 외국인 모병을 대비해 육군의 다문화가정 출신 병사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2018년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 입대 인원이 1천 명을 넘었고, 2025년에는 약 4천 명, 2030년에는 1만 명에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이 입대할 예정으로 KIDA에서 예측하고 있는데, 육본에서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

☞ 육군이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 등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이루어져야 추후 외국인 모병을 통한 병역 수급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군인복무기본법 37조와 부대관리훈령 124조에 따르면, 반기 1회 이상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있는데, 실제 야전에서 얼마나 실천되고 있나?

☞ 외국인 모병제 등 다양한 논의를 위해서는 우리 군이 다문화 환경에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함. 앞으로 육군이 어떻게 노력할 생각인가?

■ 2022년 연말, 국군 상비 전력 50만 선 붕괴

○ KIDA가 발표한 '병역 자원 감소 시대의 국방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군 상비 전력의 정원은 50만 명이었으나, 실제 연말 병력은 48만 명에 그침. **2002년 69만 명 수준이었던 국군 상비 전력 규모는 2018년 60만 선이 붕괴한 이후 불과 5년 만에 50만 선이 무너지게 된 것임.**

○ 보고서에 따르면 육군 기준 복무기간을 현재의 18개월로 유지할 경우 2030년대부터는 상비군 병력이 30만 명대로 떨어지게 됨. 특히 2038년부터는 병사보다 간부의 수가 많은 구조로 인력 비율이 반전될 것으로 예측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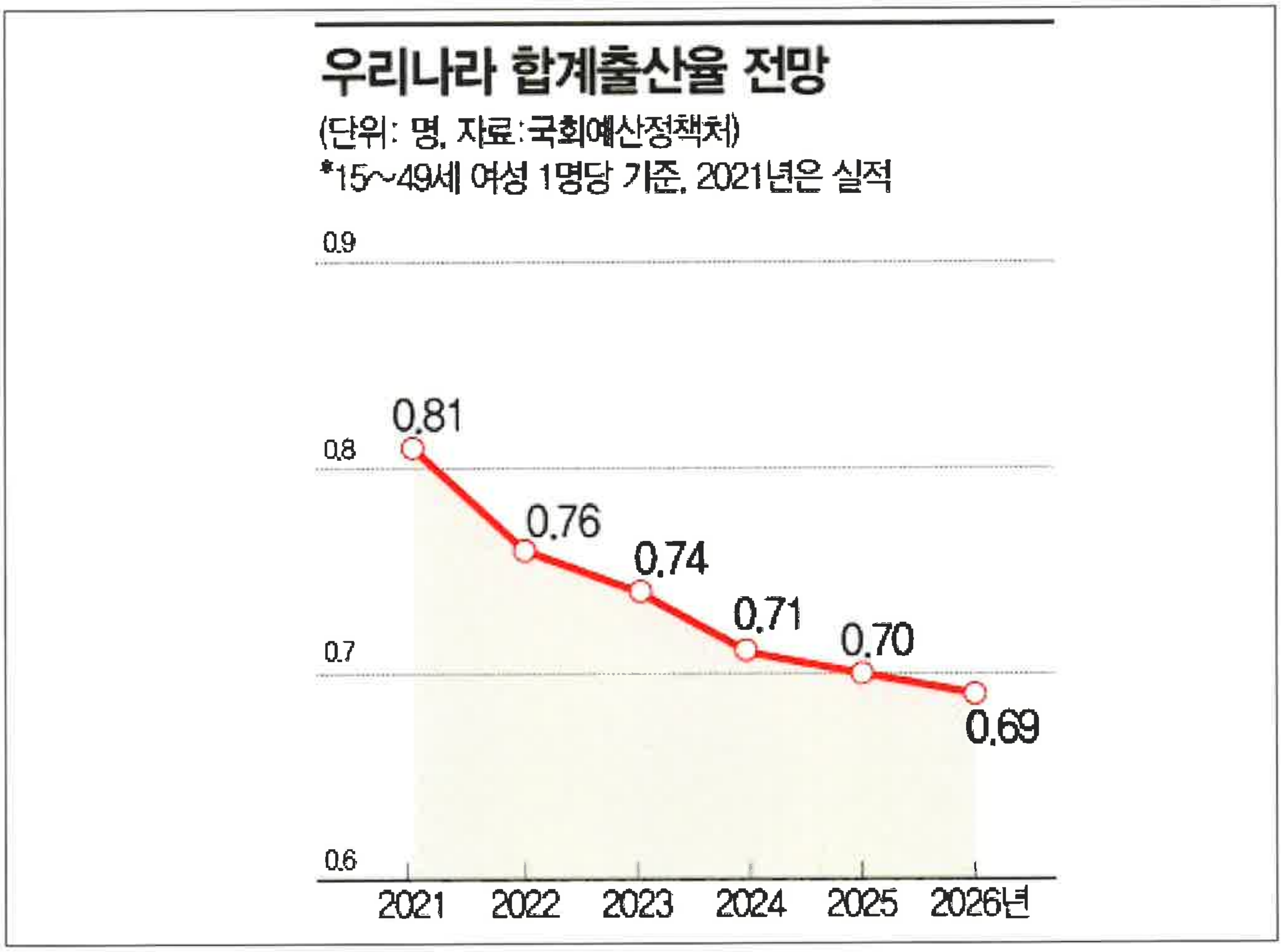
○ 국방부는 2022년 12월 '2023~2027 국방 중기계획'을 발표하며 상비 병력 정원을 2027년까지 병력 50만 선을 유지하겠다고 공헌했지만, 이미 지난 연말 해당 목표치 유지에 실패함에 따라 보완 대책 필요가 시급한 상황임.

○ 국군 상비 전력 감소 문제는 이미 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님. 출산율이 지속해서 감소하면서 인구 모집단 자체가 줄어들어 여성 징병과 모병 모두 뾰족한 대

안이 될 수 없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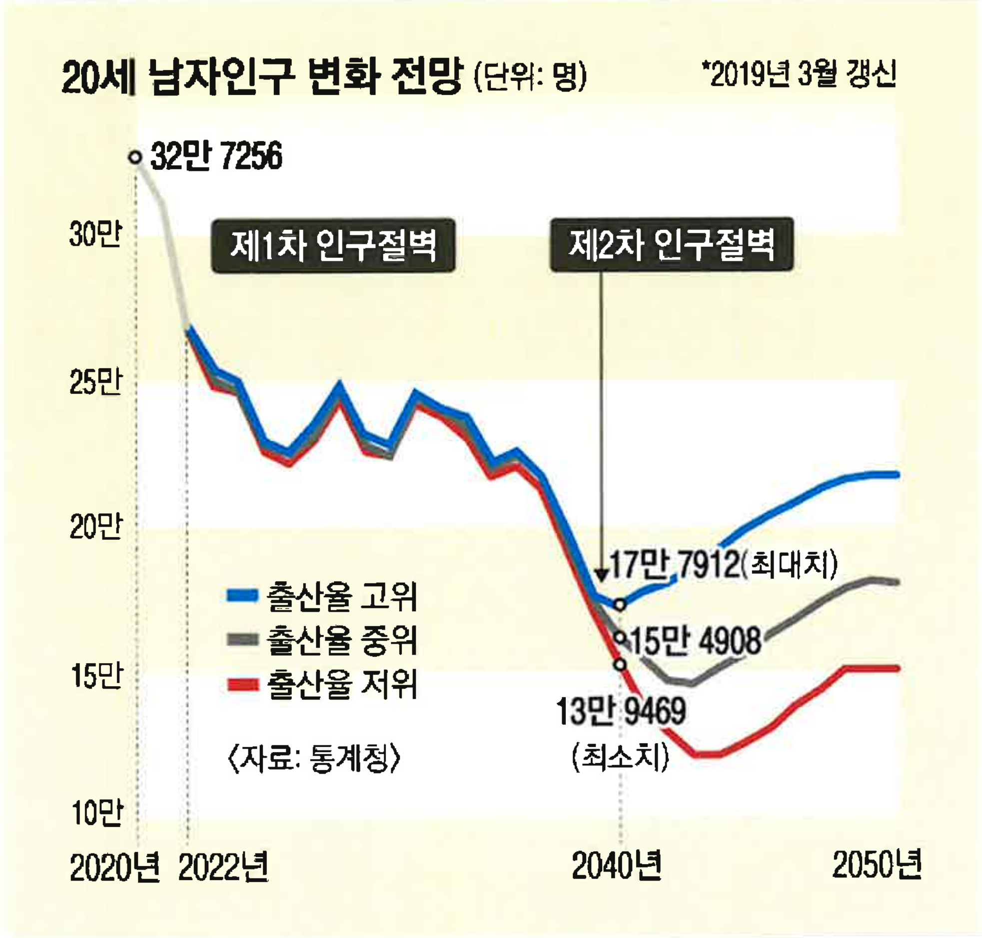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전망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 20세 남성 인구 변화 전망 >

자료출처 : 통계청



○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 33만 명에서 2025년 23만 명으로 감소할 예정임. 이후 2035년까지 23만 명 선을 유지하다 2045년에는 12만 7천 명으로 급락함. 현재 수준의 현역 판정률(2021년 83%)를 준용한 수급될 병력을 예측한다면 재난적 상황임.

○ 미국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부족한 병사 충원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인 'MAVNI' (2008년~2016년)를 운영함. 선발인원은 2015~2016 회계연도 기준 한 해 5,000명을 선발하며 주요한 미군 인력 충원 프로그램이었음.

○ 의무복무 기간 4년에 입대와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발급했고, 높은 경쟁률을 통해 우수한 자원이 많이 입대함. (언어별 경쟁률 상이)

○ MAVNI의 성공은 기존에 특수부대 위주의 소수 외국인 모병을 진행했던 영국, 프랑스, 스페인의 사례와 달리 대규모 병력 모집도 실제로 가능하고, 안보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음.

○ 최근 호주군도 2025년 1월부터 외국인에 문호를 개방할 예정임. 현재 호주군의 규모는 5만 3천 명 규모로, 2040년까지 10만 명으로 늘리는 계획임. 이외 캐나다군, 아일랜드군도 외국인 모병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모병제 전환과 여성 징병제보다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외국인 자원 모병을 통해 부족한 우리 병력자원 감소에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군 병장 월급은 2023년 기준 100만 원으로 개발도상국의 평균 근로자 월급보다 높은 실정임. 식비, 주거비가 들지 않는 군 생활 특성상 질적으로 우수한 한국어 구사 가능 외국인 자원을 모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몽골 근로자 평균 월급 한화 60만 원 선, 필리핀 근로자 평균 월급 44만 원, 러시아 근로자 평균 월급 80만 원 선

○ TOPIK 고급(3급) 이상의 한국어 구사 능력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체력적으로 우수한 외국 인력을 선발해 한국 국적을 부여하고, 현재 병사 모병 모집 제도 중 육군 '임기제부사관' 제도와 유사한 병 의무복무기간(18개월) + 부사관 연장 복무(48개월)을 통해 최소 5.5년의 중·장기 복무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음.

○ 선진국의 인구 감소에 따른 글로벌 외국인 노동력 확보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음.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외국인 노동력 확보 + 병력자원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외국인 자원 모병 프로그램을 통해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해야 함.

※ 서면질의

한기호 위원

(총 31 면)

2024-10-17 한기호의원실 서면질의

일 · 가정 양립 불가한 軍 구조, 되돌아볼 필요 있다

1 가정과 임무 모두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 육아휴직 관련, 육아휴직 **6개월 미만인 경우** 인접근무자 업무대행 수당 지급(월 20만원, 2인 공동 업무대행인 경우 각 월 10만원 지급) 하고 있으나, 일반공무원과 달리 軍은 한시임기제 및 신규 채용 등이 제한되는 상황

[육군, 2019-2024.8월 연도별 육아휴직자 현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 8월
1,742명	2,897명	2,507명	3,340명	3,609명	3,483명

○ 육군 **2023년 육아휴직자 3,609명 중 소령·대위, 상사·중사 등 실무 계급인원이 3,373명으로 육아휴직자의 93.4%** 차지

[육군, 2023년 계급별 육아휴직 사용자 현황]

(단위 : 명)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0	27	446	546	26	52	23	1,255	1,126	108

○ 軍 간부들, 육아휴직도 눈치보며 신청, 2023년 기준 육군 소령 육아휴직자 **446명 중 20.6%가 육대 소령지휘참모과정 교육생 신분**으로 육아휴직 사용

[최근 3년간 육군대학 소령지휘참모과정 교육생 중 육아휴직 신청자]

(단위 :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 9월
교육생 / 휴직신청자	1,012 / 83	1,124 / 69	1,103 / 92	655 / 34

- 소령·대위, 상사·중사급 실무자 육아휴직에 대한 부수병력 편성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야전 실무자 업무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

2024-10-17 한기호의원실 서면질의

2 순환보직, 거시적 관점서 검토할 필요

※ 현직 육군 소령(의원실 제보), "수도권 근무는 다자녀 간부(자녀 3명 이상) 우대 요건으로 충족하기 쉽지 않아 기대하지 않거니와, 근무지역(수도권-비수도권) 문제를 떠나 어디에 살더라도 잦은 이사 때문에 아내·자녀가 새로운 지역사회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고민"

○ 軍은 진급 평가 기준으로서 ▲직책평가 ▲지휘관 평정 ▲교육기관 성적 ▲상훈 등 요소에서 직책평가의 비중이 낮다고 말하지만, 진급하지 못하면 군문을 떠나야 하는 조직 특성상 직책평가만이라도 만점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함.

[육군, 2024년 경력평가지침 內 정훈병과 소령 경력평가 세부기준]

구 분		필 수 직 위	선 택 직 위
직 위		① 작전사급 이하 참모 2개 직위	② ①항과 상이한 참모 1개 직위 ③ 교관(24개월) 또는 정책부서 1개 직위
등급	상	①, ②항 또는 ①, ③항을 필한 자	
	중상	①항 1개 직위와 ②항과 ③항을 필한 자	
	중	i) ①항 1개 직위와 ②항 또는 ③항중 1개 직위를 필한 자 ii) ②항과 ③항을 필한 자	
	하	②항 또는 ③항만 필한 자	
비 고			

○ 정훈병과를 예로 들면, 소령→중령 진급시 직책평가에서 '상'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①작전사급 이하 참모 2개 직위 ②1항과 상이한 참모 1개 직위 ③교관(24개월) 또는 정책부서 1개 직위 중 1, 2항 또는 1, 3항을 필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기행병과가 전투병과보다 통상적인 진급이 1년여 늦는 점은 차치하고 소령→중령 최저복무기간이 5년임을 감안하면, **'상' 등급에 부합하려면 근무지를 5년 동안 세 번 옮겨야 하며**, 사~여단급 실무 참모나 사단참모는 각각 대위, 중령 직위이므로 작전사급 전출시 거주지 이전이 강제됨.

2024-10-17 한기호의원실 서면질의

❍ 전투병과, 기행병과를 막론하고 소령→중령 직책평가시 '상'등급은 대부분 3개 보직 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교관, (훈육관), 전발직위 중 1개 직위(24개월) 근무 시 2개 보직만으로 도달 가능)

❍ 한편 인사혁신처는 2024.1월 "공무원 장기재직 유도로 공직 전문성 제고" 보도자료 등 그간 제도개선 방향을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는 보직자의 장기간 근무를 보장해 전문성을 축적토록 하고**, 종합적 시각과 융합적 사고를 가진 인재 육성이 필요한 분야는 **순환보직을 하되 업무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해 '필수보직기간'을 엄격히 준수토록 함**.

[공무원 직위별 필수보직기간]

구분	4, 5급 이하	과장급	실·국장
일반직위	3년	2년	2년
전문직위	4년	3년	2년
전문직위군	8년	6년	4년

* 전문직위 : 국제협력,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거나 생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 기타 전략적 전문인력 육성이 필요한 분야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
* 전문직위군 : 전문직위 중 직무수행요건 또는 업무분야가 동일한 직위 그룹

❍ 또한 2016년에는 업무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경우 '전문경력관'(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하여 전보 없이 동일 직위에서 평생토록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함.

❍ 軍 순환보직은 역사와 문화를 통해 장기간 형성되어 온 것이고 전투병과에게는 다양한 보직과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 격오지-수도권 순환배치 등 인력 환기, 계급별 주요 직위나 속칭 '요직'을 고루 경험케 할 수 있는 장점 등이 있음.

2024-10-17 한기호의원실 서면질의

○ 다만 그러한 필요가 반드시 모든 병과, 모든 계급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군인은 명령에 따라야 하는 조직임은 변할 수 없으나, 신분을 떠나 **자연인으로서 가족문제와 결부되어 군복무에 회의를 느끼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되새길 필요.**

[2024. 9월 KIDA 국방사회조사통계사업 '군인자녀학교 설문 조사']

Q. 자녀교육을 위해 직업을 바꿀 것을 생각한 적이 있다. (단위 : %)

사례수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①+②	부정 ③+④
전체	**34.9**	**24.0**	**15.5**	**18.1**	**7.6**	**58.8**	**25.7**
육군	36.2	23.3	15.5	17.4	7.6	59.5	25.0

Q. 자녀교육문제와 군인의 사기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단위 : %)

사례수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①+②	부정 ③+④
전체	**60.9**	**27.0**	**7.6**	**2.6**	**2.0**	**87.9**	**4.5**
육군	60.5	26.8	7.9	2.6	2.2	87.3	4.8

Q. 현재 우리가족의 가장 큰 문제는 자녀교육이다. (단위 : %)

사례수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①+②	부정 ③+④
전체	**33.7**	**32.0**	**21.5**	**8.9**	**3.9**	**65.7**	**12.8**
육군	33.6	31.2	21.8	9.2	4.3	64.7	13.5

○ 군인에게 전·평시 구분 없는 무조건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 현재 시대상과 맞지 않다면,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면서도 군인 각각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근무 형태에 대해 큰 틀에서 검토해 볼 필요.

2024-10-17 한기호의원실 서면질의

3 제대별 업무편중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필요

○ 지상작전사령부의 경우, 예하 모든 군단에서 사령부와 군단 전체의 보직률 중 **사령부의 보직률이 높은 상황**임.

[2024. 9월 지상작전사령부 군단급 부대 편제 대비 보직률]

(단위 : %)

구분		1군단	2군단	3군단	5군단
보직률	사령부	98	97	95	96
	전체	87	88	86	85

구분		7군단	수도군단	수방사	특전사
보직률	사령부	89	96	95	97
	전체	85	87	91	84

※[참고] 사단급 제대 간부(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사, 군무원 보직률

○ 2작전사령부의 경우, 소속 간부들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으나 육군은 "2작전사가 군단이 없이 사단을 지휘통제하는 부대임을 고려하여 임무 수행과 기능 발휘에 제한이 없도록 참모 부서를 적정하게 편성"했다는 입장임.

○ 육군이 실전적 훈련여건 보장을 위한 첨단 과학화훈련체계 구축 및 포병·화생방 마일즈장비 확충을 공언하는 상황에서 교훈처 업무량이 증가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제대별 업무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지작사, 2작사 교훈처 인원 및 통제 제대] (단위 : 명)

구분	장교	부사관	군무원	계	교육훈련 통제
지작사	-	-	-	0	(교훈처 조직 없음)
1군단	7	0	2	8	3개 사단 · 5개 여단
2군단	8	1	2	11	2개 사단 · 4개 여단
3군단	9	1	2	13	3개 사단 · 7개 여단
5군단	7	0	2	12	4개 사단 · 5개 여단
7군단	8	0	3	15	4개 사단 · 2개 여단
수도군단	7	0	2	7	2개 사단 · 1개 여단
2작사	16	1	9	17	7개 사단 · 1개 여단

2024-10-17 한기호의원실 서면질의

[참고] 육규110 장교인사관리규정 별지#3 병과별 병력관리모델(대령)

병과별 경력관리 모델

● 보병·정보·포병·기갑·공병·정보통신병과

계급		필수직위	선택직위
대령		· 여단장(18) · 해분야 전문직위	· 사(여)단 참모장 · 군단 참모(18) · 군사급 이상 참모 1개 직위 · 선발직 여단장
중령	98년 이전 임관자	· 대대장(24개월 이상)	· 군단급이하 참모 1개 직위 · 군사급 이상 참모 1개 직위 · 선발직 대대장 · 교관·훈육관
중령	99년 이후 임관자	· 대대장(24개월 이상) · 군단급 이하 참모	· 필수직위와 상이한 제대 참모 1개 직위 · 선발직 대대장 · 교관·훈육관
소령		· 대대 작전과장, 선발직지휘관, 교관, 훈육관, 전발직위 · 대령급 여단·여단·사단 1개 직위(정보)	· 상이한 제대 참모 2개 직위
위관		· 중대장(36 - 48) - 1, 2차 합산	· 소대장, 대령급 여단 및 대대 참모 · 교관, 훈육관, 전발직위

① 위탁교육 이수자는 2차 중대장(위관), 참모(위관 · 영관) 직위 이수 인정

② 전문인력직위, 연합 · 합동직위 장기보직자는 개인에게 유리하게 평가

③ 합동고급과정 수료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참모직위 이수 인정(진급예정자 제외)

④ 진급심사일 기준 직책별 보직임기의 1/2 이상 보직시 직위 이수 인정

⑤ 대대장 보직기간이 36개월 이상시 참모 1개 직위 이수 인정

2024-10-17 한기호의원실 서면질의

[참고] 사단급 제대 간부(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사, 군무원 보직률 (2024.9.1. 기준)

(단위 : %)

구분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군무원
계		95	78	85	91	93
1사단	사령부	97	100	96	92	77
	전체	94	71	86	91	79
2사단	사령부	96	67	95	111	83
	전체	95	88	77	92	86
3사단	사령부	89	100	88	83	46
	전체	95	82	80	91	70
5사단	사령부	91	100	100	100	69
	전체	94	81	85	91	78
6사단	사령부	85	50	83	57	73
	전체	95	74	80	89	81
7사단	사령부	95	100	96	83	68
	전체	94	85	88	90	72
8사단	사령부	89	75	100	38	79
	전체	96	78	84	88	86
9사단	사령부	94	100	100	33	73
	전체	97	74	82	87	82
11사단	사령부	91	67	93	100	88
	전체	92	73	88	88	87
12사단	사령부	95	67	96	125	65
	전체	96	75	85	95	78
15사단	사령부	95	67	94	57	74
	전체	95	93	86	94	81
17사단	사령부	90	67	92	129	98
	전체	93	80	82	94	96
21사단	사령부	95	67	90	56	91
	전체	97	86	83	92	83

구분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군무원
22사단	사령부	96	100	97	114	67
	전체	97	84	87	97	80
25사단	사령부	83	100	100	50	86
	전체	95	67	86	85	80
28사단	사령부	91	0	88	57	90
	전체	93	74	82	87	89
31사단	사령부	99	100	100	100	68
	전체	96	82	84	91	81
32사단	사령부	99	67	100	100	98
	전체	95	85	86	97	92
35사단	사령부	91	50	100	100	78
	전체	95	67	90	100	89
36사단	사령부	97	50	96	70	95
	전체	95	50	80	94	91
37사단	사령부	94	33	91	67	82
	전체	94	33	91	94	91
39사단	사령부	97	100	96	50	92
	전체	95	71	85	102	96
50사단	사령부	99	100	100	86	95
	전체	96	75	85	92	90
51사단	사령부	94	50	100	50	85
	전체	98	75	87	96	88
52사단	사령부	100	67	100	100	100
	전체	95	50	91	88	91
53사단	사령부	94	67	92	67	93
	전체	95	88	88	98	91
55사단	사령부	98	50	83	67	95
	전체	95	71	89	94	91
56사단	사령부	100	67	100	100	93
	전체	95	67	89	88	89

2024-10-17 한기호의원실 서면질의

구분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군무원
60사단	**사령부**	100	100	92	100	100
	전체	92	75	87	89	89
66사단	**사령부**	100	100	100	100	78
	전체	94	100	86	86	90
72사단	**사령부**	100	100	94	100	94
	전체	92	100	86	94	98
73사단	**사령부**	100	100	86	100	100
	전체	96	100	87	91	100
75사단	**사령부**	100	100	88	100	94
	전체	97	100	91	90	97
수기사	**사령부**	92	67	96	88	79
	전체	94	81	80	90	81

* 위 자료는 특정 기준일의 현황으로 기준일 변경 시 변동될 수 있음.

2024-10-17 한기호의원실 서면질의

軍 간부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1 한정된 예산 내에서 '선택과 집중' 필요

[육군이 국회에 건의한 '25년 (전력운영비) 증액사업 목록]

(단위 : 억원)

주요사업	'24년 예산	'25년 부처안	'25년 정부안	증액 소요
① 중형표준차량 획득	125	1,135	357	778
② 훈련참가 간부 급식비(간부훈련급식비) 지원 * 총 소요의 20% →100%로 확대	124	766	115	651
③ 당직근무비 인상 * 평일 2→3만원, 휴일 4→6만원으로 인상	367	550	367	183
④ 단기복무간부 장려금(수당) 인상 * 장교 1,200→1,600만원, 부사관 1,000→1,300만원	606	657	497	160
⑤ 민통선 과학화 출입통제체계(RFID) 구축 * 신규12개소, 노후화 교체 32개소	1	31	0.2	30.8
⑥ 회전익조종사 연장복무 장려수당 지급 * 16-21년차 302명 대상 월 70만원(현행 0원)	-	25	0	25
⑦ 15사단 신병교육대대 실내체육관 신축	-	2.1	0	2.1
⑧ 민간조리원 위험수당·특수지근무수당 신설 * 위험수당 5만원, 특수지근무수당 6~12만원	-	2	0	2
⑨ 지역상생장병특식 지급횟수 확대 * 4회→14회	320	285	93	227
⑩ 학군후보생 생활지원금 인상 * 1인당 월 18만원 → 36만원으로 인상	109	218	109	109
계(10개 사업)	1,652	3,671	1,538	2,167

2024-10-17 한기호의원실 서면질의

❍ 육군은 `25년도 예산안 중 전력운영비 관련 10개 항목 2,167억원의 증액 소요를 국회에 건의 중

- 이중 간부 처우개선과 연관된 항목은 ▲간부훈련급식비 지원 ▲당직근무비 인상 ▲회전익조종사 연장복무 장려수당 신설이며, 초급간부 획득 관련 항목은 △단기복무장려금(수당) 인상 △학군후보생 생활지원금 인상으로, 증액 소요 총액은 1,128억원임.

❍ 이중 당직근무비 인상 항목과 관련하여, 육군은 일반 공무원에 준한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반공무원 수준 당직근무비 지급을 위해 필요한 증액 소요가 183억원이고, 소방 공무원에 준해 지급할 경우 약 550억원 증액 필요. (국군 전체 당직 수당 조정은 약 883억원 순증 필요)

군인 / 군무원		일반 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평일	휴일	평일	휴일	평일	휴일	평일	휴일
2만원	4만원	3만원	6만원	3만원	10만원	5만원	10만원

❍ 일반 공무원보다 책임과 의무가 막중함에도 일반공무원만큼의 당직근무비를 지급한다면 처우가 '정상화'됐다고 여길지 의문

- 즉 당직근무비 현실화에 집중하는 것이 예산 증액 가능성을 높이고, 당직근무가 잦은 초급간부들의 처우개선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

[육군 제대별 당직근무 직위 수 현황]

구분	작전사급	군/사단급	여단/연대급	대대급	중대급
직위 수	14	184	710	2,025	1,778
근무횟수(월)	0.75회	1.5회	4~5회	5~6회	5~6회
근무자계급	소령~대령	소령~대령	대위~소령 하사~상사	대위 하사~중사	소위~중위 하사~중사

2024-10-17 한기호의원실 서면질의

2 시간외근무수당 현실화를 위한 육군 차원의 노력 필요

❍ 국방부 제출, `24년 경계작전부대 시간외근무 월 평균 현황

구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GP	GOP·해강안	함정근무자	비행단, 미사일방어사	서북도서, 해강안
직위 수	364개	6,212개	9,026개	884개	655개
실제 시간외 근무시간	192H	130-150H	80-130H	82H	130-150H

❍ 국가인권위, `24.7.31. 해병대 방문조사 결과에 따른 인권상황 개선 권고

(해병대 방문조사 결과) **해안경계작전 임무 수행 소초 근무 간부 중 주간 1직 상황 근무를 수행하는 간부**는 평균 06시 이전에 기상하여, 병사들 취침 시간인 22시까지 부대 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주간 1직 상황 근무자는 1개월 중 퇴근 8회 및 휴가 1회를 제외하더라도 월 352시간(16시간×22일)을** 근무하고 있으나, 시간외근무는 최대 100시간만 인정받고 있다. 또한, 24시간 소초에 상주하고 있으므로 긴급 훈련 및 작업 동원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였다.

❍ 국방부가 시간외근무수당 현실화를 위해 만든 자료보다 국가인권위가 방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경계부대 일과가 더욱 현실적임.

- GP, GOP 경계부대는 주5일제 미시행 부대로, 365일 경계작전임무에 투입되고 상황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동의 자유가 없어 사실상 취침 시간 외 모든 시간이 근무시간임.

⇒ 육군, 업무보고(20-17p) '경제적 보상'에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 확대(200H 이상)"으로 기재했는데,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2024-10-17 한기호의원실 서면질의

군인 · 군무원 주거환경 개선 대책 마련해야

1 병사 위주 처우개선안, 軍 간부 소외감 및 박탈감 가중

❍ 2025년도 병장 월급 205만원 인상으로 인한 초급간부 및 중·장기 복무자 소외감 및 박탈감 가중

- 직업으로서 평생 복무해야 하는 간부들의 주거문제 해소에 주력할 필요

[2024년 육군 관사 및 관사숙소 현황]

(단위 : 실)

권역	관사			간부숙소		
	소요	보유	과부족	소요	보유	과부족
서울·경기	25,111	17,097	8,014	37,172	33,723	3,449
강원	13,305	11,097	2,208	24,344	21,357	2,987
충청	3,153	2,326	827	3,310	4,350	-1,040
경상	2,864	3,506	-642	3,300	3,680	-380
전라·제주	3,224	2,833	391	4,360	4,971	-611
계	47,657	36,859	10,798	72,486	68,081	4,405

❍ 육군 간부 숙소 68,000여 실 중 절반 이상(52%)이 준공 20년을 초과한 노후관사로, 간부숙소 1인 1실 구축 및 국민평형 관사 확보와 함께 노후화숙소 리모델링도 시급

[2024년 각 軍 간부 숙소 준공연도별 구분]

(단위 : 실)

구분	계	준공연도			
		10년 이하	10-20년	20-30년	30년 이상
육군	68,081	16,027	16,642	13,630	21,782
해군	12,151	2,049	5,100	2,795	2,207
공군	15,585	2,477	5,987	3,241	3,910
해병대	5,506	866	3,138	1,348	154
국직	6,410	1,606	975	1,707	2,122
계	107,733	22,995	31,842	22,721	30,175

2024-10-17 한기호의원실 서면질의

[간부 주거환경 개선 추진 목표 및 계획, '24년 9월 달성률]

구분	추진목표	계획	달성률
관사	국민평균 주거수준을 고려하여 부양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국민평형 관사 제공 * 3~4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대당 면적 확대(3인 64㎡, 4인 75㎡ →3~4인 85㎡) 신규 관사 건립/매입 시 국민평형 관사로 공급하여 지속개선	개선계획 (국방중기계획 기준) -'24년 49세대 -'25년 170세대 -'26년 575세대 -'27년 462세대 -'28년 619세대	5% (전체 관사대비 32평 확보율)
간부숙소	소요 대비 부족한 간부숙소를 전량 확보하여 초급간부 거주 여건 보장 '26년까지 간부숙소 1인1실 확보	1인1실 확보계획 -'24년 1,982실 -'25년 2,435실 -'26년 3,669실	89% (간부숙소 1인1실 확보율)

[병영생활관 개선 추진 목표 및 계획, '24년 9월 달성률]

구분	추진목표	계획	달성률
병영생활관	국민 생활수준 및 미래세대 장병의 요구수준을 충족하도록 병영생활관 內 생활실을 4인실로 개선하고 * 1인당 기준면적 확대(6.3㎡→10.78㎡) 위생시설(화장실·샤워실)을 포함한 4인실로 개선 추진 시설 노후 정도 및 개선시점 도래에 맞춰 지속개선	개선계획 (국방중기계획 기준) -'24년 50동 -'25년 51동 -'26년 45동 -'27년 57동 -'28년 56동	3.8%*

* 국정과제 107번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內 "국격에 맞는 의·식·주 개선" 사업 일환으로 2024년부터 예산안 편성되어 달성률이 3.8%에 불과

* 다만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으로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형 생활관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완료했고, 부대이전 및 창설·개편 부대분에 대한 현대화(침대형 생활관)를 계속 추진해왔음.

2024-10-17 한기호의원실 서면질의

2 국군의 일원 '군무원', 주거난 해소 계획은?

○ 군무원은 엄연히 국군의 일원으로서, 처우개선을 위한 軍 차원의 관심 경주 필요

○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고자 국방부는 군무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군이 기존에 하고 있는 역할 일부를 군무원에게 이양하고자 정원을 늘리고 있지만, **군무원의 책임과 역할만 확대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우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022~2024.9월 연도별 군무원 현원]

(단위 : 명)

구분	'22년 말	'23년 말	'24년 9월
육군	25,696	26,503	26,678
해군	4,961	5,083	5,174
공군	5,410	5,442	5,473
해병대	872	972	1,040
국직부대	7,920	7,956	7,987
합계	44,859	45,956	46,352

○ **특히, 군무원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 중 하나인 숙소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음.** 각 군 특성에 따라 직업군인처럼 근무지가 계속 바뀌거나 격오지에서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지원이 없는 실정임.

⇒ **현재 군무원 주택수당이나 숙소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 **군무원에 대한 주택수당은 지원 규정조차 없는 상황이며, 군무원에게 軍 숙소를 지원하는 규정마저 "제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뿐**이며, 국방부는 군무원들이 군 숙소 입주를 얼마나 원하는지 그 수요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2024-10-17 한기호의원실 서면질의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15조(시설관리 등)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관사 또는 간부숙소가 장기공실이 예상되는 경우, 「군무원 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국방대교수, 국방정책 추진을 위해 고용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어린이집 교사 등 민간 고용 인력에 한하여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이때 입주 조건은 제10조 제1항을 준용하며 재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입주기간을 최소 1년으로 하되, 입주자가 신청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단, 퇴직 등 퇴거사유 발생 시 퇴거기한은 퇴거통보일로부터 2개월로 한다.

제36조(간부숙소의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⑦ 각 군 등의 장은 격오지(GOP 지원부대, 서북도서 등) 근무 군무원에 대해 군 숙소 여건을 고려하여 가용한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군무원 대상 숙소 지원은 장기공실 또는 장기공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한 상황으로, 대체적으로 6개월 정도의 장기공실이 발생해야 군무원에게 숙소를 지원해주는 수준임. 6개월이라는 기준마저도 각 부대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결국 군무원 숙소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음.

○ 군무원 숙소 지원에 대한 명확한 제공 기준도, 공급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군무원에게 지원되는 숙소 수량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임.

[최근 3년간 군무원 숙소 지원 현황]

(단위 : 명)

구분(연도)	합 계	관 사	간부숙소
'22년	5,071	3,620	1,451
'23년	5,675	4,009	1,666
'24년	6,535	4,436	2,099

○ 현재 군무원 정원 대비 **17% 정도 인원(6,535명)만 숙소를 지원 받음. 나머지 각군에서 근무하는 군무원들은 자비로 숙소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임.

2024-10-17 한기호의원실 서면질의

⇒ 사람이 생활하는 데 기본이 되는 주거에 대해서조차 지원을 안 해주면서 지금 군무원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군무원 지원율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건지?

⇒ 군무원 인력 규모를 늘려 이들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장병들은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국방부의 목적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 그러나 군무원의 임무ㆍ역할을 확대하는 만큼, 군무원의 처우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군무원 지원율 또한 감소할 것이며, 결국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려는 국방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됨. 군무원 인력 운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무원 처우 개선에 대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람

2024-10-17 한기호의원실 서면질의

육군 헬기 노후기종, 비행기록장치 설치 필요

1 자동차용 블랙박스 달고 다니는 육군 헬기 절반 이상(350여 대, 58%)

❍ 통칭 '블랙박스', 항공기용 비행기록장치는 항공사고 및 사고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항공기에 장착되는 전자기록장치로서, 항공기의 3차원적인 비행경로와 각 장치의 단위별 작동상태를 디지털, 자기 또는 수치신호로 녹화·보존하여 사고 발생시 원인 규명 목적으로 운용

❍ 이에 블랙박스는 커다란 충격이나 화재속에서도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분리되지 않도록 기록장치에 고정시킨 수중위치전파발생기를 최소 90일간 작동할 수 있어야 하는 등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음(국토부,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 한편 육군은 아파치(AH-1S), 치누크(CH-47), 블랙호크(UH-60) 등 7개 기종·약 600여대의 헬기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중 4개 기종 350여 대가 '항공기용 블랙박스'를 장착하지 않은 상황임

[2024년 기준 육군 운용 헬기 현황]

유형	전력화 시기	보유량		수명연한	도태계획	목표가동률	비행기록 장치
		대수	%				
500MD	1970년대	150	25	30년	'20년 중반	97%	X
AH-1S	1980년대	60	10	30년	'20년 중후반	운항중지*	X
CH-47	1980년대	30	5	40년	'20년 중후반	71%	X
UH-60	1990년대	110	18	40년	'30년 후반	100%	X
BO-105	1990년대	10	2	30년	'20년 중반	43%	O
KUH-1	2010년대	210	35	40년	미정	109%	O
AH-64E	2010년대	30	5	30년	미정	96%	O

* 2023.8월 지상 비행점검 중 회전날개 분리·파손, 육군은 사고원인 확인될 때까지 운용 중단 결정(부상·사망자 없음)

❍ 육군 보유 **헬기 600여대 중 58.3%에 달하는 350여대가** 설치시점 당시 기준 **17만원짜리 자동차용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있음.

- 육군 헬기에 장착된 '자동차용 블랙박스'*는 방탄, 방수, 방염, 방화 등 어떠한 기능도 없는 '상용 블랙박스'에 불과

*단, 조종사 머리 위쪽에 장착되어 조종 상황, 계기판 조작 등을 녹화

※[참고] UH-60 등 헬기 장착 블랙박스 사진

[육군 헬기에 장착된 '자동차용 블랙박스' 현황]

구 분	품명	설치시점	가 격	녹화 조건 및 시간	기 타
500MD	카이드록스 CD-3000	'11년	약 17만원	상시 3분, 이벤트 60초 최대저장기간 : 54H	방탄, 방수, 방염, 방화 기능 없음
AH-1S		'12년		상시 3분, 이벤트 30초 최대저장기간 : 8H	
UH-60		'10년		상시 3분, 이벤트 30초 최대저장기간 : 8H	
CH-47		'11년		상시 3분, 이벤트 60초 최대저장기간 : 54H	

2 민간항공도 비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군용 헬기는 적용 제외

❍ 2022년 양양 헬기추락사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민간 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 마련' 보도자료를 통해 운송용·사업용 헬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2022.11.28. 경향신문, "'5명 사망' 양양 헬기 사고 본격 조사 착수… 블랙박스 없어 원인 규명 어려움 예상"

[2022년 양양 산불진화용 헬기(S-58T) 추락 사고 개요]

발생일시 : 2022.11.27. 10:50
발생위치 :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야산
기 종 : Sikorsky S-58T(생산일 : 1975.2.17.)
피 해 : 탑승객 5명 전원 사망
특이사항 : 헬기임대업체는 사고헬기가 화물용 헬기라는 이유로 비행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초기 사망자 신원 확인이 제한됐으며, **현재까지 추락 사유 불명**

2024-10-17 한기호의원실 서면질의

○ 2022.11월 국토교통부는 2023년부터 기종에 맞는 비행기록장치가 개발·생산되지 않은 헬기라도 예외없이 조종실 비행데이터 등을 모니터할 수 있는 대체장치를 설치·운용하게끔 규정 개정계획 발표

- **2023년 부로 모든 민항 헬기에 비행기록장치(및 대체장치) 설치 의무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내역(2023.9. 시행)

종전	현행
1989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헬리콥터로서 최대이륙중량이 3천18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헬리콥터. 이 경우 비행기록장치에는 10시간 이상 비행자료를 기록하고, 2시간 이상 조종실 내 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헬리콥터. 이 경우 비행기록장치에는 10시간 이상 비행자료를 기록하고, 2시간 이상 조종실 내 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 단, 「항공안전법」상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는 적용 제외

- 소방·해경-"운용 전기종 비행기록장치 및 대체장치 장착된 상태", 경찰-"19대 중 13대 장착", 관세청-"회전익 없음"

[국토교통부, 비행기록장치 '대체장비' 설치대상 및 성능요건]

(대상)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헬리콥터의 경우에는 **비행기록장치를 대신하여 대체장비를 장착해야 한다.**

1) 적합한 비행기록장치가 개발되지 아니하거나 생산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항공기에 비행기록장치를 장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개조 등의 기술이 그 항공기의 제작사 등에 의하여 개발되지 아니한 경우
3), 4) (생략)

(성능요건) **대체장비는 다음 각호의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하나(통합형) 또는 개별장치로 구성할 수 있다.

1) 최종비행 2시간 이상 고도, 속도, 위치정보 기록
2) 최종비행 2시간 이상 조종실 내 계기판 녹화
3) 최종비행 2시간 이상 조종실 내 음성기록

○ 그간 민간항공도 비행기록장치 장착 기종에 예외를 두는 등 관리 사각지대를 방치하다 대형사고를 겪고 뒤늦게 규정 개정

○ 육군이 운용하는 헬기 절반 이상이 '10년 전 자동차용 블랙박스'를 장착한 바, 만에 하나라도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에 도움을 줄 확률이 매우 희박함.

-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통상 항공기가 갖춰야 하는 블랙박스 수준 구비할 필요

3 육군 '현존전력 극대화 사업 추진' 문제점

○ 육군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노후기종에 비행기록장치를 장착하고자 `25년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신청**했고, 방위사업청도 `25년 현존 사업 우선검토 대상과제로 선정함. (헬기 비행기록장치 교체 사업)

[육군 헬기 비행기록장치 교체사업 추진경과]

날짜	추진 경과 및 계획	주관
'23. 8월	육군 운용헬기 녹음 및 녹화장비 운용실태 점검	육군
'24. 3월	'25년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신청서 제출	
'24. 7월	우선검토 대상사업 선정 및 사전분석 착수	방사청
'24. 9월	사전분석 추진을 위한 사업 예비설명회	
'24. 10월 / 12월	(現 단계) 사전분석 중간 및 최종토론회	
'24. 12월	'25년 현존전력 성능극대화 대상사업 최종선정	

○ 그러나 육군은 비행기록장치 사업에서 ①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②비행임무분석(디브리핑)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ROC는 美 국방부 군사표준규격(MIL-STD)에 따른 사용환경(온·습도, 진동, 충격, 가속도 등)만을 요구하여 **화염·충격·관통·압착·염수 등 항공기용 블랙박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2024-10-17 한기호의원실 서면질의

[각 군 헬기 비행기록장치 교체사업 비교]

구분		육군	해군·공군
교체시점		사업 검토 단계	해군('23-'25년) 공군('14-'18년)
소요제기 목적		비행임무분석 및 사고시 사고 조사	
장착 대상		노후 기종	
요구조건	비행임무 디브리핑 (영상·음성·비행정보 저장)	O	O
	메모리카드 생존성	X 일반 메모리카드	O 데이터 생존이 가능하도록 설계
	MIL-STD 인증	O	O

※ 메모리카드 생존성 요건을 추가하더라도 비용 측면에서는 극적인 차이 없음 (비행기록장비 기준 데이터 생존성 요구시 4,800만원 / 일반 메모리카드 장착시 4,000만원 내외 / 장착비·감항비 포함 대당 1억여 원 소요)

❍ 결정적으로, 현재 **육군이 요구하는 비행기록장치 성능**은 기록 저장을 일반 상용 메모리카드에 저장토록 하여 **사고 발생 시 데이터 생존을 담보할 수 없음.**

❍ 해군·공군은 美 국방부 군사표준규격(MIL-STD) 기준뿐만 아니라 국제기준에 따른 충돌 보호 메모리 모듈 (CPMM, Crash Protected Memory Module)을 장착하여 화염·총격·관통·해수·유체 오염·압착 등에 데이터 보존 내성을 갖추었음.

❍ 또한 소요제기 과정에서 비행기록장치 장착이 필요한 **노후 기종 350대** 중 상대적으로 도태 연한이 가까운 **500MD, 코브라(AH-1S) 기종 일부를 제외한 199대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도태연한이 가까울수록 사고 위험도 높아진다는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로, 당장 노후 기종을 퇴역할 계획이 아닌 이상 전량 비행기록장치 설치 필요

2024-10-17 한기호의원실 서면질의

❍ 육군, '숙련 조종사 유출 심각'을 근거로 2025년 예산안 관련 연장복무 장려수당 25억원 반영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숙련된 조종사들이 위험을 무릅쓰며 자동차용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노후 기체를 운용하는 현실도 되짚을 필요.

⇒ 자동차 사고와 달리 항공사고 특성상 기체가 온전하지 않을 확률이 높으므로,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데이터가 파손되지 않아야 할 것임.

⇒ 육군이 도입을 추진하는 비행기록장치는 상용 메모리카드를 사용하여 데이터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데, 블랙박스의 핵심적인 기능을 왜 제외하는 것인지?

⇒ 우리 軍은 숙련된 조종인원의 이탈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물론 민간항공에 비해 낮은 급여나 위험한 임무, 긴 임무비행시간 등 여러 요소들이 존재하겠지만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세심한 조치가 필요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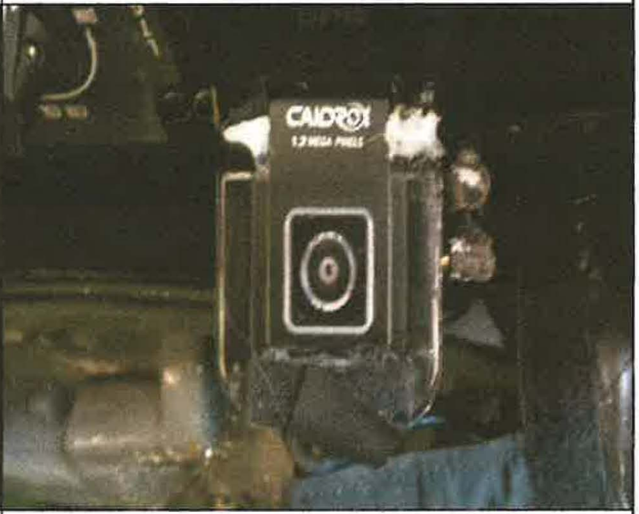
⇒ 무엇보다 '곧 도태될 장비'라는 이유로 약 150대 가량을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당장 도태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라도 육군항공 조종병력 2,200여명 중 누군가를 태워야 한다면 반드시 성능이 보장된 블랙박스를 장착하길 바람.

※[참고] UH-60 등 헬기 장착 블랙박스 사진

UH-60

500MD

AH-1S



CH-47

2024-10-17 한기호의원실 서면질의

육군 차원의 민간군사기업 제도 구상 필요

❍ 국방부가 수립한 「`24~`28 국방중기계획」, 상비병력 50만명을 제시하고 있지만 `24.6월 기준 상비병력 46.8만명으로 이미 기준치 하회

❍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초급간부 처우개선 문제 및 중·장기복무자 이탈 등 병역자원 확보 비상*

* 2023년 KIDA, 향후 10년간 상비병력 평균은 47만명 전후를 유지하다가 2038년경 39만 6천여 명으로, 40만명 이하로 내려갈 것을 전망

[육군 정원 감소 추이]

연도	2006	2018	2020	2022	2024
정원	54.1만	46.4만	42.0만	36.5만	36.5만

❍ 현대전에서도 敵에 상응하는 지상군 확보 필요, 2022 국방백서 기준 상비병력 128만여 명의 북한군을 마주한 국군 입장에서는 전투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 특히 육군 입장에서는 병력감소가 전투력감소로 직결되는 만큼, 전투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2024. 9월 육군 제출. 정원 및 편제병력, 부수병력 및 운영률 현황]

구분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합계
정원(A)	43,600	3,500	86,300	231,700	365,100
평시편제병력	39,500	3,400	85,100	219,500	347,500
부수병력	4,100	100	1,200	12,200	17,600
운영인력(B)	43,900	3,100	77,800	223,800	348,600
운영률(B/A)	100.6%	88.8%	90.1%	96.6%	95.4%

2024-10-17 한기호의원실 서면질의

❍ 특히 육군 전 병력이 35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투원 확보를 위한 육군 차원의 각별한 조직개편 구상 및 노력 필요

❍ 단적인 예로, 민간조리원 제도를 통해 비전투분야 민간인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육군 조리병만 8,300여 명에 달함.

[2024.7월 기준 민간조리원 및 조리병 현황]

구분	계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민간조리원(현원)	2,689	2,247	95	137	210
조리병*	11,236	8,300	1,439	1,200	297

* 조리특기 외 조리지원병 포함

❍ 이와 별개로, 민간인력 활용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분적으로 활용하다보니, 야전에서의 지휘부담이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현재 민간인력의 대표적 활용은 민간조리원·시설관리관 등 공무직 근로자 형태이나, 사단 단위로 대대급 민간조리원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 주체인 각 제대 지휘관에게 관리책임이 부과되고 있음.

⇒ **전투만 생각해야 하는 야전 지휘관이 노무관리 책임까지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육군본부 차원에서 민간인력 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과 지원을 가질 필요가 있고,**

⇒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될 민간군사기업 제도화 과정에서도 육군의 입장과 필요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주길 바람.**

2024-10-17 한기호의원실 서면질의

군단급 무인기 전력공백, 대책은?

❍ 2018. 9·19 군사합의 이후 군단급 무인기 운용도 중단되었으나, 2023.11.22.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을 중지한 오후 3시를 기점으로 군단급 무인기가 다시 투입되고 있음.

❍ 한편 수도군단 및 1·2·3·5군단은 송골매·서처(Searcher)로 北 장사정포·오물풍선 부양지역 등 핵심 표적 감시중이나 장비 노후화·잦은 고장과 함께 이미 `17년에 수명연한이 도래하여 핵심 표적 식별 제한 우려

[군단급 무인기 표적 식별능력 감소 질의에 대한 지작사 답변]

• 표적 식별 능력 및 신호세기 감소 현상은 없으나, 군단 UAV 감시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지작사 헤론과 전구 ISR 자산을 적극 활용하여 표적 식별 및 최신화 주기를 단축 시키고 있습니다. 끝.

❍ 또한 軍은 2023.11월 이후 군단급 무인기 **'목표 가동률의 달성률'**만을 **제출**하여 실제 감시능력이 얼마나 제한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제한됨.

• 2023. 11월 이후 기종별 월 평균 장비 가동률(목표 가동률의 달성률)은 헤론 89%, 서처 27%, 송골매 114% ~ 128% 수준입니다. * 실제 가동률은 주요 전력의 운영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으로 '목표 가동률의 달성률'로 대체하여 제출합니다. (목표 달성률의 달성률 (%) = (해당 월별 가동률 ÷ 목표 가동률) × 100) * 서처는 장비 노후화로 '25년 도태 예정 장비입니다. • 2023. 11월 이후 가동 중단된 경우는 송골매 1건입니다. 가동 중단일은 '23년 12월 (약 1개월)이며, 사고로 인한 사고조사 및 원인 파악을 위해 중단되었습니다.

2024-10-17 한기호의원실 서면질의

❍ 단 "2023.11월 이후 가동 중단된 경우는 송골매 1건"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최근 3년간 군단급 무인기 정비내역에는 2023.12월부터 2024.9.8.까지 여섯 번의 정비가 이뤄졌음.

- KAI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공급한 **송골매(30대)**는 2024.7월 기준 **21대만 가동**되며, 작전 투입도 **2018년부터 1일 1회에서 주 2회로 줄였으나 현재는 주 1회 미만으로 대폭 축소**됨.

[2023.11월 이후 송골매 정비내역]

장비명	정비일시	정비사유
송골매	2023-12-13	기체 수리
	2024-05-20	지상장비 통신/전자장치 오류
	2024-06-21	비행체 통신/전자장치 기능 고장
	2024-07-19	비행체 통신/전자장치 기능 고장
	2024-08-01	비행체 항법감지장치 수리
	2024-09-08	비행체 항법감지장치 수리

❍ 또한 **서처 3기만을 운용하던 5군단 지원을 위해 군단별 송골매 1기씩을 제공***한 만큼 기존 편제장비가 줄어든 것인데, '전방 표적 식별에 이상 없다'는 軍 해명은 의문이 있음.

* 1999년 도입한 '서처' 3기는 제작사(이스라엘 IAI 社) A/S 중단으로 인해 '24.6월 부 가동 중단, 서처를 운용하던 5군단에는 군단별 송골매 1대씩을 지원

⇒ **현재 운용중인 군단급 무인기 기종 모두 수명연한을 초과해서 기체 운용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방 표적감시 능력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 다만 軍은 노후 기체 보완 및 감시전력 공백 방지를 위해 ①기존 무인기 자산 분산 운용 ②군집드론(`26년~), UAV-Ⅱ*(`27년~) 조기 전력화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임.

* 송골매 무인기 후속기로 국방과학연구소·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개발중

❍ 그러나 군집드론은 감시·정찰 능력이 무인기에 못미치고, 송골매를 대체할 UAV-Ⅱ 양산은 빨라야 2027년 이후로 최소 2년 이상 공백 발생

- 무인기 공백은 전방 군단의 北 도발 대응 역량 저하와 함께 전방 군단으로부터 전장 정보를 받아 작전을 통제하는 지작사의 전시 대비 태세 약화로 연결될 우려

❍ 작전대비태세 및 감시정찰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국산 무인기 도입을 계속 추진하되, UAV-Ⅱ 도입·운용 차질에 대비하여 美 신형 무인기 모하비* 등 도입 가능성(소요제기)도 검토 필요

* 체공시간, 운용고도 등에서 UAV-Ⅱ보다 우위에 있고, 최단거리 이륙 무인기로서 야전 비상·비포장 활주로에서도 운용 가능하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美 제너럴 아토믹스社(제조사)와 협력 타진 중으로 알려짐.

❍ 北,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등 남북간 단절 조치 강화, 대남 적대적 태도와 군사적 도발 가능성 증가 등 군사분계선 인근 군사적 활동 강화에 대한 면밀한 감시체계 가동 및 징후 파악 중요

⇒ 차기 군단급 무인기 전력화 시기는 2027년인데, 제때 전력화되더라도 최소 2년 가량은 군단급 감시정찰능력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 아닌지?

⇒ 육군은 현행작전 대비태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전방지역 핵심 표적 감시·정찰 능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2024-10-17 한기호의원실 서면질의

K2 전차 하드킬 도입 및 K1 계열 전차 생존성 향상 방안

❍ K2 전차 능동방어체계(APS), 대응파괴장치(하드킬) 미장착

- 국내 배치된 K2 전차의 경우, 유도교란장치(소프트킬) 장착으로 적외선 추적 회피는 가능하지만, 대응파괴장치는 장착하지 않음*.

  * '17.2월 전력소요검증 당시 대응파괴장치를 설치할 경우, 보전협동작전 간 전차 옆으로 기동하는 보병이 하드킬 파편에 부상당할 수 있음을 고려, '17.7월 제17-4차 합동전략회의에서 대응파괴장치(하드킬)를 ROC에서 삭제

❍ 현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핵심기술과제*로 대응파괴장치(하드킬)를 현용 및 차세대 전차·장갑차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이며, 전력화는 2027년 이후로 예상됨.

  * 핵심기술과제 명칭 : 다중 위협체 대응 지능형 능동방어 기술

❍ 北 신형 대전차무기인 '불새-4'(관통력 600~800mm), 우리 軍 K1E1·K1A2 정면 및 측면, K2 측면 파괴 가능한 관통력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며 '불새-5'(관통력 1,000~1,200mm)는 K계열 전차의 정면과 측면 모두를 관통할 것으로 추정됨.

[K 계열 전차 방호력]

구분		K1E1	K1A2	K2
차체(mm)	정면	610	610	900
	측면	330	330	330
포탑 전면		X	X	장착
반응장갑		X	X	장착
레이저경고장치		X	X	장착
유도교란장치		X	X	장착
보유대수		1,027	484	260

2024-10-17 한기호의원실 서면질의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등장한 '전차 잡는 드론'으로 정면·측면 방호 뿐만 아니라 상부 방어 필요성 대두

- 우크라이나 軍, 시중에서 구매 가능한 저렴한 소형 드론에 RPG-7이나 박격포탄을 테이프로 묶어 전차의 취약부분에 드론을 충돌시키는 방식으로 러시아 전차 무력화

❍ **우리 軍 전차 성능개량 시 소형·저속·고각 접근 물체에 대한 능동방어 체계 구축* 필요**

* 방위사업청, 올해 2030년 이후로 K2 전차 대상 대전차미사일 및 드론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복합능동방호장치 장착(개량) 계획 언급

❍ 육군이 최초 K2 개발단계에서 하드킬 제외를 건의했고, 그 이유가 보전협동작전시 전차 하드킬에 의한 보병 피해를 우려한 것이라고 하는데, 앞으로의 전쟁 양상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 전차, 장갑차에 대항한 우크라이나 軍 공격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특히 우크라이나는 소형 드론에 박격포탄을 테이프로 붙여서 전차 취약부분에 충돌시키는 방식으로 러시아 전차를 무력화시키고 있는데, 현재 우리 軍 전차에 탑재된 능동방어체계로 이러한 변칙적인 공격을 방어해 낼 수 있다고 보는지?

⇒ 북한도 전차 상부 공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북한판 스파이크 미사일'을 공개한 바 있고, 러우전쟁을 통해서 전차를 무력화시킬 방법을 학습하고 있을 것임.

⇒ 북한이 보유한 대전차 미사일 중에서 '불새-5'는 우리 전차 전면, 측면 모두 관통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軍 전차 생존성 강화를 위해서 소요군인 육군이 하드킬 장착을 검토할 필요.

＊답변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박선원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박선원 의원>

1-1. 지난 9월 11일 오전 계룡대 대규모 정전으로 인한 육군의 피해규모는 어느정도였나?

<육군본부 공병실>

○ 육군 피해는 없었습니다. <끝>

<박선원 의원>
1-2. 계룡대에서 정전이 발생한 이유는?

<육군본부 공병실>

○ 계룡대 근무지원단 확인결과 한전 측 이상전압으로 인해 자동부하 전환 개폐장치(ALTS 제어반) 고장이 발생하여 정전되었습니다. <끝>

<박선원 의원>

1-3. 국방 · 군사시설기준에 따르면 계룡대도 예비전력 체계를 갖춰야하는 시설 중 하나로 잘 갖추고 있는가?

<육군본부 공병실>

○ 한전으로부터 주·예비 전력(이중화 케이블)을 수전 받고 있고, 자체 비상발전기도 갖추고 있습니다. <끝>

<박선원 의원>

1-4. 국방 · 군사시설 기준에 따르면 예비전력은 주전력 변전소와 분리해 별도의 변전소에서 공급 받아야 함. 한군전력측과 협의를 통해 예비전력 분리를 조속히 추진해야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조치하겠는가?

<육군본부 공병실>

○ 예비전력 분리가 되도록 국방부로 건의하겠습니다. <끝>

＊답변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부승찬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부승찬 의원>

5-1. STE 합성훈련환경체계, ITE 합성전장훈련체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 알고 있습니다.

○ STE 합성훈련환경체계는 하나의 가상환경에서 가상모의(보병훈련기, 전차·포병·공병 시뮬레이터 등), 지휘소(대대급), 게임(PC)체계를 통합하여 대대급이 제병협동훈련을 하기 위한 훈련체계이며,

○ ITE 합성전장훈련체계는 실 전장(KCTC)과 가상모의(항공시뮬레이터), 지휘소(BCTP 창조 21)를 상호 연동하여 군(사)단이 실전적 통합훈련을 하기 위한 훈련체계입니다. <끝>

<부승찬 의원> **5-2. LVCG를 STE로 통합하겠다고 하면서 여단급 제대 이상에서는 LVC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면 당장 이 사업을 중지하고 사업의 목표, 개념을 재설정해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 STE와 ITE는 훈련제대, 훈련체계가 상이하며 훈련 목표와 개념은 각각 정립되어 있습니다. <끝>

<부승찬 의원>
5-3. 가상훈련도구가 다를 수는 있어도 결국 이를 연동하고 훈련을 운영하는 운용체계는 하나여야 육군의 어느 제대도 사용 가능하고 향후 국방클라우드의 활용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 향후 국내 기술수준과 훈련소요를 고려하여 하나의 운용체계로 상호 연동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끝>

<부승찬 의원>

5-4. 과학화훈련은 하나의 운영체제 SW만 있으면 모듈화, 계열화하여 사용하고 향후 우리 군의 편제 변화에도 적절하게 사용할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총장님 동의하십니까?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 현재는 과학화훈련체계별로 SW를 사용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하나의 SW로 구축이 되어야 군의 편제 변화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끝>

<부승찬 의원>
5-5. 교육사가 이야기하는 '메타버스 합성훈련환경 시범체계 구축·실증 사업'이 2차 평가 중인데 3기갑여단과의(기계화부대 과학화 전술훈련체계) 연동이 계획대로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 연동에 대한 평가는 올 1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끝>

<부승찬 의원>
5-6. 3기갑여단의 운용체계는 외국산임. 미국도 그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었음. 우리도 국산 기술로 SW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총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 현재, 사업추진 로드맵에 의거 시범사업에 대한 선행연구를 실시 중이며, 선행연구 결과를 기초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끝>

<부승찬 의원>
5-7. 현재 낙후된 주거환경으로 인해 군 주거시설 이용자의 47%가 불만족하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 예, 알고 있습니다. <끝>

<부승찬 의원>
5-8. 초급간부들에게 제대로 된 숙소도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대적관, 애국심만을 강조한다고 되겠습니까?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며,
숙소를 포함하여 초급간부 복지 및 복무여건 개선에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끝>

<부승찬 의원>
5-9. 관사가 부족한 지역에 있어서는 전세대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또한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만이 있다고 하는데, 실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 지원금은 32평 전세가 기준 72% 수준으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 지원기준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끝>

<부승찬 의원>
5-10. 군 부대가 많은 녹지지역이나 그린벨트 지역 내 주거시설 건립을 위하여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린벨트법」 등을 개정이 필요합니까?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 네, 맞습니다. <끝>

<부승찬 의원>
5-11. 국방위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셔서 국토위 의원님들을 설득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 말씀에 동의하며, 의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국토위 의원님들을 만나 전방위적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

<부승찬 의원>

5-12. 군부대 이전시 군은 부지를, LH는 공공임대를 제공하면 육군과 LH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의견은?

<육군 인사참모부>

○ 의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육군은 현재 인제군과 군무원 주거지원을 위한 민·관·군 상생협력모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제군에서는 40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목표로 국토교통부, LH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끝>

----------<참고자료> --

○ 인제군 민·관·군 상생협력모델 공공임대주택 사업(안)

• 사업규모

구 분	계	인제군 남면	인제군 북면
내 용	400세대	300세대	100세대

• 주택유형 : 2개 모델 / 10평(원룸형), 14평(투룸형)

• 입주비용(예상) : 월 30만원 미만

• 사업일정(목표) : 국토부 승인 및 시공(~'27년), 입주('28년 이후)

<부승찬 의원>
5-13. 회전날개가 분리되는 사건으로 아직까지 원인과 검사절차가 확립되지 않아 운항 재개가 되지 않은 것인데 맞습니까?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 네. 맞습니다. <끝>

<부승찬 의원>
5-14. 코브라헬기가 1년 넘게 운항정지 중입니다.
전력운영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 아파치헬기 등 타 기종 운용을 통해 전력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끝>

<부승찬 의원>
5-15. 2018년에도 회전날개가 분리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 네. 있으나, 원인은 각각 다른 사례입니다. <끝>

<부승찬 의원>

5-16. 우리 군의 코브라 헬기 도태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 올해부터 LAH 전력화에 따라, 코브라 헬기는 ’20년대 중반부터 순차적으로 도태할 예정입니다. <끝>

<부승찬 의원>
5-17.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전력에 대해 운항을 재개할 수 없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1년이 넘게 대책이 완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 사고 후 날개의 원제작사에 의한 분석이 장기간 소요된 것이 원인입니다. <끝>

<부승찬 의원>
5-18. 기술교범에 따라 Tap-Test, 즉 날개표면을 두드려서 내부 결함을 식별한 것입니다. 사실상 육안검사랑 무엇이 다릅니까?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 Tap-Test는 제작사 기술교범에 따라 검증된 검사방법이며, 복합재인 날개는 X-ray나 초음파 검사 등 비파괴검사로 결함식별이 불가하고, Tap-Test가 최적의 검사방법입니다. <끝>

<부승찬 의원>

5-19. 외주정비업체로 하여금 검사방법을 개발하게 하였고, 현재 이 방법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전수검사 언제 종료됩니까?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 올해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끝>

<부승찬 의원>
5-20. 일명 마일즈 왕이라고 불린 '김 원사'가 지난 8월 26일 구속되었습니다. 김원사의 비리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 알고 있습니다. 군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8월에 기소되었습니다. <끝>

<부승찬 의원>
5-21. 군 검찰에 따르면, 뇌물을 제공한 두 업체의 수주 사업의 수익 규모가 1천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부정한 수익을 거둔 업체의 이익을 회수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총장님 동의하십니까?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으로 결과에 따라 밝혀질 사항입니다. <끝>

<부승찬 의원>
5-22. 김 원사는 특정 업체에 수익을 몰아주기 위한 구매요구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확인하였습니까?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으로 결과에 따라 밝혀질 사항입니다. <끝>

<부승찬 의원>

5-23. 지난해 12월 남양주 예비군훈련장에 납품되었지만 통신불량으로 사용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는 하자구상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 예비군훈련장에 납품된 장비는 조치가 완료되어 정상 사용 중입니다. <끝>

<부승찬 의원>
5-24. 해당 통신모듈이 얼마나 공급되었는지 전수조사는 실시하였습니까?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 해당 통신모듈을 사용한 마일즈 장비 사업들을 확인했으며, 현재까지 장비 운용간 식별된 문제점이나 사용자 불만사항은 없었습니다. <끝>

<부승찬 의원>

5-25. 통신불량의 이유가 김원사가 두둔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의 통신모듈 변경이라는 의혹에 대해 육군의 조사 결과는 무엇입니까?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 해당 인원은 예비군 마일즈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인원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밝혀질 사항입니다. <끝>

<부승찬 의원>
5-26. 이전에 사용하던 통신모듈이 단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육군은 단종을 이유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또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 당시 업무담당자는 제조사로부터 통신모듈 사업 중단 문서를 접수받아 변경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끝>

<부승찬 의원> **5-27. 2020년부터 국방부·합참·각군 그리고 KIDA까지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고, 설계안 마련 및 완전성을 제고를 위한 토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 ’23년 12월부터 TF를 구성하여 미래 군구조 설계를 위한 연구 및 토의를 추진 중임. <끝>

<부승찬 의원>
5-28. 병력감소, 하이브리드전 이런 환경이라면 지금보다는 부대구조가 단순화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M-BCN, 정찰 및 군위성통신의 확보로 인해 C2가 한 화면에서 가능해진 상황이라면 더욱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육군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 강화된 C2능력을 통해 '감시-결심-타격'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미래의 각급 부대가 강화된 C2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중임. <끝>

<부승찬 의원>
5-29. 유·무인 복합체계가 도입되면 당장 인력 감축의 효과가 있습니까? 운용병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소대 중화기병이 아니라 드론 운용병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 유·무인복합체계 구축 일환으로 기존 무기를 자동화하고 신무기로 대체시 인력 효율화 가능

○ 일부 박격포 전력을 드론 전력으로 대체하기 위해 드론부대를 설계 중임. <끝>

<부승찬 의원>
5-30. 지금의 부대구조는 유·무인 복합은 물론 첨단 장비를 운용하기에 맞지 않는 부대구조가 아닌가 하는데 총장님 의견은 무엇입니까?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 유·무인복합체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 부대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함. 따라서 육군은 미래 첨단 과학기술과 작전환경을 고려하여 부대구조를 설계 중임. <끝>

<부승찬 의원>
5-31 2작전사는 기존 후방작전 중심에서 주변국과 비전통 위협을 중심으로 무게 중심을 전환하여 우주, 사이버, 대테러 등의 하이브리드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육군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 2작전사는 주변국 및 비전통 위협, 하이브리드전에 대비하여 정보부대, 광역타격부대, 방공부대 등의 능력을 강화토록 부대구조를 설계 중임. <끝>

<부승찬 의원>

5-32. 계급정년 등으로 군을 떠난 인재들을 적극 활용한다면 우리 군의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 경험이 풍부한 제대군인을 활용한다면 군은 전투임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

<부승찬 의원>
5-33. 올해 간부 모집 상황은 어떻습니까? 획득소요 계획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작년 지원수준 보다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 선발시 까지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끝>

<부승찬 의원>

5-34. 대위, 중ㆍ상사 계급의 희망전역자는 늘어나고 있고, 특히 부사관의 희망전역자는 2019년 1,070명에서 2023년에는 1,910명으로 78.5% 증가하였습니다. 총장님 알고 계시죠?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 전역자 전체인원 중 희망전역이 증가하고 있고, 부사관의 희망전역 증가도 알고 있습니다. <끝>

<부승찬 의원>

5-35. 육군의 직업만족도가 2020년 79.2%에서 2023년에는 49.6%로 무려 30% 가까이 하락하였습니다. 2명 중 1명이 직업으로서의 육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총장님 동의하시죠?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 관련하여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상황개선을 위해 법령과 예산확보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의 지원과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끝>

<부승찬 의원>
5-36. 초급간부 자산형성지원금이라는 대책을 업무보고서에 적어 놓았는데, 공무원에게 급여가 아닌 적금형식의 지원이 가능한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 법령개정(병역법,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자산형성지원금 지원이 가능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음. <끝>

<부승찬 의원>

5-37. 초급간부 자산형성지원금 정책 시행시 소요예산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 24개월 기준 약 1,700억원임. <끝>

<부승찬 의원>
5-38. 돈이 얼마나 들더라도 전수조사를 제안합니다. 그래야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하고, 대국민, 대국회, 타 부처를 설득하는 근거야 될 것입니다. 총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 깊이 공감하며,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끝>

*답변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한기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한기호 의원>
9-1. '경제적 보상'에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 확대 (200H 이상)로 기재했는데,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 실제 GP의 경우 월 192시간을 초과근무하고 있으며, 관련부처(인사혁신처)에서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와 연계하여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끝>

----------<참고자료> --

○ '24년 경계작전부대 시간외근무 현황 (월 상한시간 100H)

구 분	계	GP	GOP
직위 수	6,576개	364개	6,212개
실제 시간외 근무시간	·	192H	130～152H

<한기호 의원>
9-2. 현재 군무원 주택수당이나 숙소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 국방부 훈령에 의해 가용공실 범위 내 숙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주택수당 지급 및 숙소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와 연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

<한기호 의원>
9-3. 주거 지원 대책 없이 군무원 정원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군무원 지원율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건지?

<육군 인사참모부>

○ 의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육군은 군무원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①「군인복지기본법」상 주거지원 대상에 군무원 편입 추진과, ② 군무원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

<한기호 의원>
9-4. 육군이 도입을 추진하는 비행기록장치는 상용 메모리카드를 사용하여 데이터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데, 블랙박스의 핵심적인 기능을 왜 제외하는 것인지?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 육군은 올 초에 ‘헬기 비행정보 저장장치 성능개선’ 현존전력 성능극대화 사업을 신청한 상태이며,

○ 사업분석 과정에서 데이터 보존에 필요한 내화, 방염 등 추가 성능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끝>

<한기호 의원>
9-5. 현재 운용 중인 군단급 무인기 기종 모두 수명 연한을 초과해서 기체 운용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방 표적감시 능력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 군단UAV-Ⅱ 전력화시까지
현용 군단 무인기의 운용기간 연장을 위한
성능개량을 진행 중으로 올해 12월에 완료 예정이며,

○ 또한, 군단 UAV 감시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새매, 봉화 등 연합 및 합동 ISR 자산을 적극 활용하여
표적 식별 및 최신화 주기를 단축하고 있습니다. <끝>

<한기호 의원>
9-6. 차기 군단급 무인기 전력화시기는 2027년인데, 제때 전력화 되더라도 최소 2년 가량은 군단급 감시정찰 능력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 아닌지?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 현용 연합 및 합동 ISR자산에 추가하여 올해 말부터 전력화 예정인 MUAV급 무인기를 활용하여 군단 전방지역 감시정찰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끝>

<한기호 의원>
9-7. 최초 K2전차 개발단계에서 보병 피해를 우려하여 하드킬이 제외되었는데, 앞으로의 전쟁 양상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 복합능동방호체계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K2전차 성능개량 시 보강하겠습니다.

○ 현재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도로 대응파괴방식, 지향성 방해 등 복합능동방호체계 핵심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 K1계열 전차는 가용 중량 범위 내에서 장착방안을 검토하여 능동방호체계 구비를 추진하겠습니다.

○ K1계열 전차의 가용 중량은 1톤 이내입니다. <끝>

<한기호 의원>
9-8.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軍의 소형드론 공격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현재 우리 軍 전차는 소형드론을 방어할 수 있는가?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 현재 전차에 탑재된 유도교란방식의 능동방어체계는 소형드론 공격에는 대응이 제한됩니다.

○ 향후 관련 핵심기술 확보 이후 복합능동방호체계를 장착하여 소형드론 공격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답변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김민석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김민석 의원>
12-1. 면접평가 비율이 높은 편인데 이유는?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 군 간부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심층깊게 평가할 수 있어, 면접평가 비율을 높게 반영하였습니다. <끝>

----------<참고자료> --

○ 군별 ROTC 선발 시 면접평가 반영비율

구 분	육 군	해 군	공 군		해병대
			조종	일반	
총 점	1,000점	100점	170점	100점	200점
배 점	400점	45점	70점	30점	70점
비 율	40%	45%	41%	30%	35%

○ 면접평가 배점 및 평가요소 (총 400점)

구 분		평 가 요 소
대면 면접 (320점)	1차 (집단토론)	표현력, 논리성, 참여도, 이해력
	2차 (개별면접)	국가관/안보관, 리더십/사회성, 인성/품성
AI 면접 (80점)		· 소프트스킬 : 자신감, 논리성, 호감도, 활기참, 긍정성, 집중도, 진실성, 침착성, 신뢰성 · BEI 역량평가 : 윤리의식, 회복탄력성, 솔선수범, 공감소통, 임무수행

<김민석 의원>
12-2. 후반기 선발시부터 AI 평가를 반영 안하는 이유는?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 지원자들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여 중도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 AI 면접평가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 권고사항에 따라 선발의 공정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5년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25년 국방연도예산 AI 면접평가 예산 미편성(육·해·공군, 해병대). <끝>

----------<참고자료> --

○ 국회예산정책처 권고사항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① AI 면접평가 도입후에도 기존 면접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추진 효율성이 없음 ② 공무원인 군인을 AI 면접을 통해 선발하는 것이 채용의 공정성과 타당성, 국민 수용가능 여부에 대한 고민 필요 * 평가방식 알고리즘은 업체 영업기밀로 분류, 평가과정 검증 제한 ③ 개인정보 관련법령 저촉여부 검토 필요 * 인공지능 기술활용 판단과정과 결과에 대한 설명 보장,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김민석 의원>
12-3. 대학성적 반영비율이 타 군에 비해 현저히 낮고, 불합격 기준도 없음. 이에 대한 육군의 입장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 '24년 선발결과를 분석하여 적정 대학성적 반영비율을 검토하겠습니다. <끝>

----------<참고자료> --

○ 군별 대학성적 반영비율

구 분	육 군	해 군	공 군	해병대
총 점	1,000점	100점	100점	200점
배 점	200점	50점	30점	80점
비 율	20%	50%	30%	40%

<김민석 의원>
12-4. 필기시험 폐지가 '23년 모범 사례에 선정되었는데 선정기준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 모범사례는 국방부에서 선정한 사안으로 정확한 기준은 확인이 제한됩니다.

○ 다만, 필기시험 폐지를 통해 지원자 부담감 해소,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인력운영 등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끝>

<김민석 의원> **12-5. 필기시험은 지난 15년간 운영되어 왔음. 이제 와서 비용과 인력소요의 문제를 필기시험 실효성 문제와 연결시키는게 상식적인 사고 맞는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 인력획득 환경 변화에 따른 필기평가의 실효성을 판단한 조치이며,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필기시험을 대학성적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끝>

----------<참고자료> --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조 장교후보생 및 예비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

1. 필기시험 : 영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응시자의 학력에 따라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관후보생 응시자 중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병역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응시자**에 대해서는 **출신대학 또는 재학 중인 대학에서의 학업성적으로 필기시험을 갈음**할 수 있음

<김민석 의원>
12-6. 필기시험 폐지를 통해 예산절감과 업무효율성을 증대시켰다고 자화자찬을 할 때인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 우수한 ROTC 후보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모집홍보 노력과 처우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끝>

<김민석 의원>
12-7. 향후 ROTC 선발 평가 기준과 내용 보완계획 수립해 별도 보고하기 바랍니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 ’24년 선발결과를 분석하여 적정 대학성적, 면접평가 반영비율 등을 검토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

<김민석 의원>
12-8 해당 CCTV를 가장 많이 보유한 육군이 정작 거의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에 따른 감시 공백이 장기화할수록 장병들이 추가 투입되어 희생하게 되는데? 선제적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 않나?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 전방지역은 교체완료, 기타 지역은 12월 한 완료예정임.

<김민석 의원>

12-9. CCTV 관련 매년 보안점검 또는 보안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나? 군의 기밀과 직결되는 점검이 요식행위로 이뤄진 것이 아닌지?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CCTV와 관련해서는 '24년 6월 개정된 훈령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시험기관의 국가 인증을 받은 제품만 도입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TTA 인증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시험표준을 통과한 제품으로 사용에 안전을 보장한다는 인증 마크 <끝>

<김민석 의원>
12-10. CCTV와 같은 감시장비는 장비 획득 후 몇 년을 주기로 교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가? 예하부대는 CCTV관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하달된 바 있나?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내용연수 범위 10년(8년~12년)을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육군은 별도 CCTV 관리 규정은 없으나, 군수품관리훈령에 의거 수명주기를 관리하고 있음

-

<김민석 의원>

12-11. 야전에서는 상용품의 경우 업체가 지정하는 주기가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관리하고 있다는데? CCTV는 국가정보 보안에 직결되는 장비인데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나?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 육군은 군수품관리훈령에 의거 사업유형별로 수명주기를 관리 하고 있고, CCTV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김민석 의원>
12-12. 예하부대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한 CCTV가 보안시설에 설치된다면,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해 부대 지휘관에게 떠넘길 셈인가? 지침을 주고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 기존에는 CCTV 단순 교체시 해부대에서 보안측정을 생략할 수 있었으나, ’24년 6월부 개정된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국가 인증 CCTV만 도입할 수 있도록 보안지침을 강화하였습니다.

○ 또한, 육군은 CCTV 도입 · 운용 시 보안대책 준수 강조지시 (’24.10.10.)를 하달하여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끝>

<김민석 의원>
12-13. 경계작전이 이뤄지는 전방은 노출되면 안 되고, 후방에 있는 주둔지와 훈련장은 상관없다는 보안의식 자체가 매우 큰 문제 아닌가?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 주둔지와 훈련장에 설치된 CCTV도 군사시설에서 설치·운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군사보안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 향후 CCTV 도입시 TTA 인증 등 변경된 보안절차를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끝>

<김민석 의원>
12-14. CCTV가 200여대 설치됐었던 과학화 훈련장의 경우 KCTC 훈련이 진행되는 곳이 아닌가? 우리 군의 전략과 전술이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도 있었는데, 사태를 덮기 급급한 군의 태도가 적절하다고 보나?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 KCTC훈련장에는 해당 CCTV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 타 과학화훈련장에 설치된 CCTV는 철거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는 TT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증받은 제품을 설치토록 훈령과 규정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끝>

<김민석 의원>
12-15. 현재 인구절벽으로 육군에서 상당한 인원을 감축해야 할 텐데, CCTV 보안관리가 이렇게 미진해서야 되겠는가?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 육군은 '24년 6월부 개정된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국가 인증 CCTV만 도입할 수 있도록 보안지침을 강화하였고, CCTV 도입 · 운용 시 보안대책 준수 강조지시('24.10.10.)를 하달하여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끝>

<김민석 의원>
12-16. 총장께서 책임지고 육본 내 여러 과로 나뉘어 있는 CCTV 관리책임을 하나로 모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침을 명확하게 내려 보안점검을 철저히 진행하겠나?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 육군은 CCTV 관리책임을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육군은 CCTV 보안관리 지침과 CCTV 도입 · 운용 시 보안대책('24.10.10.)을 기하달하였고, 향후에도 보안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

*답변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강대식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강대식 의원> **13-1. 현재, 항공장비 보유률이 편제 대비 91% 수준에 불과하여 유사시 군의 작전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 500MD, BO-105, AH-1S의 도태로 인해 편제 대비 91% 수준임. 타 기종은 98% 수준이며, 목표 가동률(7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임무수행에 제한 없습니다.

○ 해당장비는 단계적으로 대체장비가 전력화 될 예정입니다. <끝>

<강대식 의원>
13-2. 항공장비 완전편성을 위한 육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 편제 대비 부족한 항공장비는 노후 헬기에 해당되며,

○ 500MD, AH-1S, BO-105는 올해부터 '30년대 초반까지 신형헬기인 LAH로 대체하여 완편 예정이고,

○ CH-47D는 '20년대 중후반에 신형헬기인 CH-47F로 대체하여 완편 예정입니다. <끝>

<강대식 의원>
13-3. 항공장비를 제외한 장비들은 100% 보유률을 유지중입니다. 하지만, 방공, 화포, 화생방, 항공 장비들의 약 40%가 수명을 초과한 노후장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후화된 장비들이 다수 있어서 실전에서의 작전 운용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육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 노후장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정비체계를 유지하고, 신규장비의 전력화와 현용장비의 성능개량을 지속 추진중입니다. <끝>

<강대식 의원>
13-4. 유사시 전력발휘 극대화와 전투력의 지속은 장비의 충분한 보유와 적절한 관리가 필수적이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부족장비에 대한 편제장비 보강과 신규장비의 적기 전력화를 통해 전력발휘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강대식 의원>
13-5. 편제장비의 완전 편성과 노후화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와 건조계획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 편제장비 보강과 노후장비 대체를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필요한 예산 확보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강대식 의원>
13-6. 화생방보호의 보유수준이 낮아, 고도화되고 있는 북 핵·미사일, 화학무기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 최초 '19년부터 화생방보호의-Ⅱ 전력화가 계획됨에 따라, 중복성을 고려하여 현용 화생방보호의는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 화생방보호의-Ⅱ 개발이 지연되어, 현용 화생방보호의 재확보를 추진하여 획득 중이나, '22년도 신뢰성검사 결과 부적격품 다수 발생으로 보유율이 저하되었습니다. <끝>

<강대식 의원>
13-7. 화생방보호의-Ⅱ 개발지연 이유와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 ’19년 업체 기술부족으로 개발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 최근 방위사업청에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로 재결정하여 사업추진 중으로, 적기 전력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

<강대식 의원>
13-8. 육군의 부족한 화생방보호의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 전투준비태세 등을 고려 ’27년까지 부족한 현용 화생방 보호의를 집중 확보 중입니다.

○ 계획 대비 부족한 예산은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강대식 의원>
13-9. 70년대 기술로 개발된 現 중형차량은 운용측면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총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 동의합니다.
안전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기적인 예방정비와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 후 운용 중임. <끝>

<강대식 의원>
13-10. 새로 개발이 완료된 新 중형표준차량을 조기에 전력화 시킬 방법은 무엇입니까?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 편제 부족 소요를 2030년까지 100%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음. 국회차원에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림. <끝>

<강대식 의원>

13-11. GOP과학화경계시스템은 '22년부터 '24년까지 22사단 경미한 성능개량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올해부터 '27년까지 성능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 네, 맞습니다.

○ 경미한 성능개량사업은 '24년 전력화 완료 예정이며, 성능개량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중입니다. <끝>

<강대식 의원>
13-12.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 간 유리섬유로 된 광망은 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모두 철거하는 것이 맞는지?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 네, 맞습니다.

○ 기존 광망은 노후화 및 자연현상에 의한 오경보가 발생하고 유지보수 소요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끝>

<강대식 의원>
13-13.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의 오류, 오경보, 오작동 등의 문제 발생은 감지시스템인가? 감시시스템인가?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 감지시스템은 광망 방식으로 바람이나 동물 등의 접촉으로 인해 오류 및 오경보가 발생합니다.

○ 감시시스템은 동작인식 방식으로 나뭇가지 흔들림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 오경보가 발생합니다. <끝>

<강대식 의원>
13-14.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 간 오작동 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 동의합니다.

○ 감지시스템은 진동, 열화상, 레이더 등 복합센서를 적용하고, 통제시스템은 AI를 기반으로 한 객체인식을 통해 사람만을 인식하여 탐지율이 향상되고 오경보율이 감소됩니다. <끝>

<강대식 의원> **13-15. GOP 작전 환경에 적합한 시험평가 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가?**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 동의합니다.

○ 다양한 지형 및 기상에서 엄격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끝>

＊답변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강선영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강선영 의원>
16-1. 군단급 방공, 공병, 항공병과 대령의 평정 및 지휘추천 그룹 분리에 대한 의견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 군단급 방공, 공병, 항공병과 대령에 대한 평정 및 지휘추천을 각 병과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경우, 1/1 평가대상자 증가로 우수자원 식별 및 변별력 향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답변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성일종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성일종 의원>
17-1. 병력 감소에 따른 지역방위사단 예하 부대 통·폐합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 현재, 단기간 내 사단 또는 여단 단위로 부대를 통폐합 할 계획은 없음. 그러나, 병력감소와 연계하여 작전개념, 전력화, 가용부지 등 제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사안으로 판단됨. <끝>

<성일종 의원>
17-2. 병역 감소 추이 고려시 현재의 지역방위사단 편제 (現 3만 3천명)를 유지할 수 있는가?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 현 수준의 현역인원 수 유지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현역은 전투인력 위주 보직하고, 비전투분야는 군무원과 민간분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연계하여 계획을 발전중에 있음. <끝>

<성일종 의원>
17-3. 경계분야의 민간인 근로자의 외주가 이루어졌을 때, 법령개정 소요가 있는가?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 현행 경비업법은 특수경비업무를 국가중요시설에 한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사중요시설로 확대하기 위한 법령개정이 필요합니다. <끝>

<성일종 의원>
17-4. 학군단 모집 경쟁률과 임관 인원이 지속 감소하고 있음.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및 후보생의 입영 훈련비 인상이 이루어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유가 무엇인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 병역자원의 지속적인 감소, 처우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회보다 열악한 복무환경 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

○ 단기복무장려금과 학군생활지원금 인상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중으로 의원님의 관심과 지원 부탁 드립니다.

<성일종 의원>

17-5. 학군단 자원과 병사 간 10개월의 차이가 나는 복무기간에 대한 감축이 필요한 상황인데, 육군의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 학군장교의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연계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끝>

----------<참고자료> ---

○ 신분별 의무복무기간 비교

구 분	장 교		부사관	병
	학군장교	학사장교		
기 간	28개월	36개월	48개월	18개월

* 학군장교 의무복무기간 : '62년 (24개월) → '68년 (27개월) → '94년 이후 (28개월)

<성일종 의원>
17-6. 3사관학교 선발인원과 임관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3사관학교 임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 선발제도 개선, 단계적으로 임관시 장기복무 비율 확대, 장기복무 선발인원 확대, 여생도 비율 확대 등 관련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

<성일종 의원>
17-7. 총장, 추후 외국인 모병을 대비해 육군의 다문화가정 출신 병사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 다문화 장병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 등 교육을 하고 있으며, 부대별 개인 고충 해결 등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

<성일종 의원>

17-8. 2030년에는 1만 명에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이 입대할 예정으로 KIDA에서 예측하고 있는데, 육본에서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 1만명 수준으로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

<성일종 의원> **17-9. 육군이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 등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이루어져야 추후 외국인 모병을 통한 병역 수급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군인복무기본법 37조와 부대관리훈령 124조에 따르면, 반기 1회 이상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있는데, 실제 야전에서 얼마나 실천되고 있나?**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 자대교육으로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반기 1회 교육 중이며, 외부 전문강사 교육도 병행하여 진행 중입니다.

* ’24년 계획 : 수방사 1113공병단 등 79개 부대. <끝>

<성일종 의원>
**17-10. 외국인 모병제 등 다양한 논의를 위해서는 우리 군이 다문화 환경에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함.
앞으로 육군이 어떻게 노력할 생각인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 KIDA 등 관련 기관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